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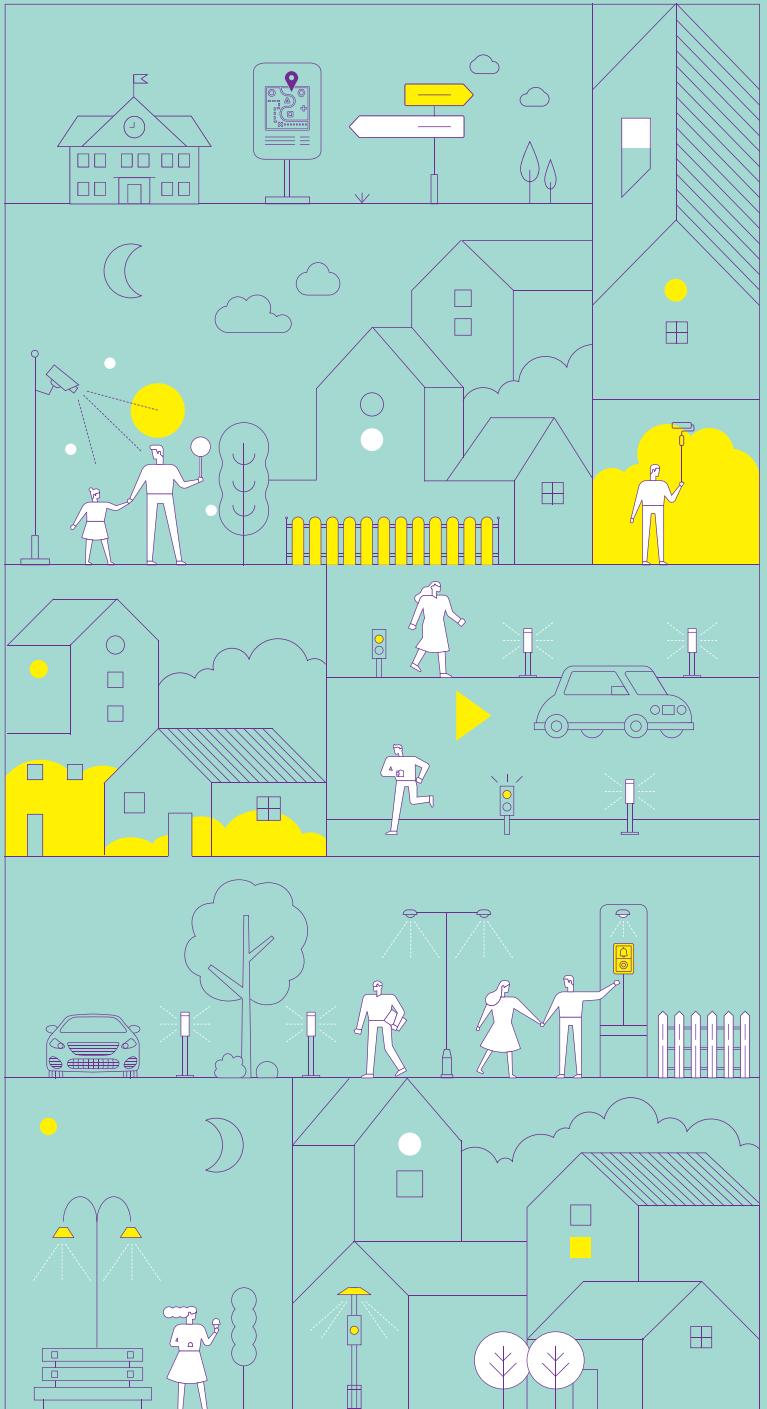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공간연구원이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저널

Vol.50 - Summer 2023

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K-CPTED로의 진화

CPTED 관련 내용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CPTED 관련 사업, 제도 등 다양한 변화와
시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형 CPTE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 u r i)

건축과 도시공간

Vol.50 - Summer 2023

(a u r _ i)

건축과 도시공간

Vol.50
Summer 2023

발행
2023년 6월 30일

〈건축과 도시공간〉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책전문지입니다.

발행인

이영범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건축공간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책임

고효진

정책이슈 기획
임보영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편집
이미영, 김민자

본 연구원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빼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리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기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가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표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일은
결국 그곳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필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환경에 맞는,
우리만의 한국형 CPTED의
적용 방식을 고민합니다.

CONTENTS

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K-CPTED로의 진화

K-CPTED로의 발전 방향	장석진	006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과제	부영준·박종균	014
지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실현	김혜진	020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함께 만드는 K-CPTED 실현 방안	임보영·허재석	028

통계자료실

일상에서 만나는 가로녹지, 여러분의 생각은?	김영지	036
--------------------------	-----	-----

건축도시동향

해외동향	미국의 지역사회지속거주 방안, Accessory Dwelling Unit	윤진희	042
	파리 광장 리노베이션 현황과 의의	유무종	048
국내동향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	김기훈	052
	더욱 안전한 보행을 위한 인천형 공공디자인 'Hospital zone'	임철희	056
해외단신	AIA, 2023 도서관 건축상 수상작 발표 외		060
국내단신	행정안전부, 마을·시장·골목 활력 찾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외		064

장소탐방

보이지 않는 건축 –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박종훈	072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배경으로서의 건축 – 남산동 주민공동시설	조경빈	088

auri 소식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104
· 제8차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 개최	108
· 공익적 주택법제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109
· 2023 건축공간연구원-(사)한국여성 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 개최	109
· 2023 대한건축학회-건축공간연구원 건축자산 정책세미나 개최	110
·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CPTED 정책 발전 방향 심포지엄 개최	110
· 2023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개최	111
· 2023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	111
· 2023 공공건축지원센터-건축문화자산센터 공동세미나 개최	112
· 2023년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건축공간연구원 기획발표세션 진행	112
· 2023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개최	113
·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개최	113
· 2023 국제 공공건축 네트워크 연례 컨퍼런스 참석	114
· 건축공간연구원-청주시 서원구청-청주상당경찰서-서원대학교 MOU 체결	115
· 건축공간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MOU 체결	115

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K-CPTED로의 진화

1

새 정부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CPTED 관련 사업, 정책 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2022년도에 대통령 훈령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올해 3월에는 범부처 협동으로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하반기에는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 합동평가지표,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CPTED 관련 내용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CPTED 관련 사업, 제도 등 다양한 변화와 시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간 중앙부처, 건축공간연구원, 지역사회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한국형 CPTE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CPTED 사업의 과정



대상지 사업 추진 모습



경찰청 CPTED 사업 우수사례(총특 영동군)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과제

014

지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실현

020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함께 만드는 K-CPTED

실현 방안

028

K-CPTED로의 발전 방향 | '안전'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CPTED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회적 가치이다. 그런 만큼 무장애(Barrier-free) 인증이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K-CPTED도 기본적이며 중요한 건축도시계획 개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과제 |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된 정책의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수 사례를 포함함으로써 지자체의 사업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현장의 실질적인 CPTED 사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좌우되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CPTED 사업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실현 | 치안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치안 인력은 부족한 현실에서 너무나 많은 변수로 인해 이제는 경찰만의 힘으로는 주민 안전을 100%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에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을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함께 만드는 K-CPTED 실현 방안 | 2013년 서울시 '소금길' 사업이 성공모델로 평가받아 CPTED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2015년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정으로 CPTED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건축공간연구원은 2016년 1월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K-CPTED로의 발전 방향

강석진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한국셀테드학회 연구부회장

CPTED의 시작

1950년대 이후 기능 중심의 근대 도시공간과 건축물의 확산은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이 시기 제인 제이콥스(Jacobs, 1961)는 북미 지역 대도시의 공공 가로가 교통의 효율을 중시하며 획일적으로 계획됨에 따라 사람의 활동은 위축되고 가로의 활력은 감소하면서 범죄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이콥스가 주목한 것은 가로구조와 시설 배치에 따른 공간 활성화인데, 소규모 상점이 부족하고 경로 선택의 수가 적은 가로에서는 매력도(attractiveness)와 접근성(accessibility)이 떨어져서 유동 인구 감소 및 상권 위축 등으로 도시가 쇠퇴하면서 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으로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 개념이 제안되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가로에서 복합용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배치되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어 자연스럽게 주변의 관심과 감시 가능성이 높아져서 범죄행위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시기에 사람(범죄자, 피해자) 중심의 범죄예방 대책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범죄에 취약한 환경(environment)이나 상황(situation)을 고려한 연구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뉴욕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였던 오스카 뉴먼(Oscar Newman)의 ‘주거지역 범

죄예방 연구'이다. 뉴먼은 1950~1960년대 북미 지역에서 대규모로 조성된 고층 주거단지에서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고 환경 디자인과 범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감시·접근통제·영역성 관점에서 주거단지의 규모와 배치, 기타 건축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방어공간 이론(Defensible Space Theory, 1972)'이 발표되었다.

한편 사회학을 전공한 범죄학자인 플로리다주립대의 C. 레이 제프리(C. Ray Jeffery) 교수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1971년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이라는 저서를 통해 CPTED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방어공간이론의 적용 대상이 주거지로 한정되었다면, CPTED 이론은 주거·상업·공공·교통시설·학교·공원 등 다양한 도시건축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으며, 연구 및 실증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대표적인 현대 범죄학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CPTED 도입과 현황

도시건축 분야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1986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방어공간을 주제로 한 연구가 게재된 바 있으며, 2000년 이후 CPTED 관련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0년 한국셉테드학회가 창립되면서 CPTED는 전문 연구 분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09년 서울시 뉴타운 사업 CPTED 지침이 은평 뉴타운 등에 적용되고, 2010년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뉴타운의 CPTED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선언적인 지침 및 제도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CPTED 적용을 유도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012년 서울시 올림픽 소금길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시범사업이 확산되었다.

법·제도 관점에서 주목할 것은 국토교통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2013년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2014년 「건축법」을 개정(제53조의 2항 신설)하고 2015년에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한 것이다. 이는 해외 선진국



우리나라 CPTED의 흐름

에서도 드문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CPTED를 법정계획으로 의무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였다.*

CPTED 적용과 효과

CPTED의 적용 대상은 크게 건축물과 가로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로공간의 CPTED는 범죄 취약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되는데, 이러한 사업은 보통 ‘현황 분석 → 계획 수립 → 전략 실행 → 유지 · 관리’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현황 분석 단계에서는 물리적인 통계, 사회인구 통계와 함께 범죄통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인터뷰, 현장 조사를 통한 안전 지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죄를 유발하거나 억제하는 요인을 규명(범죄 위험도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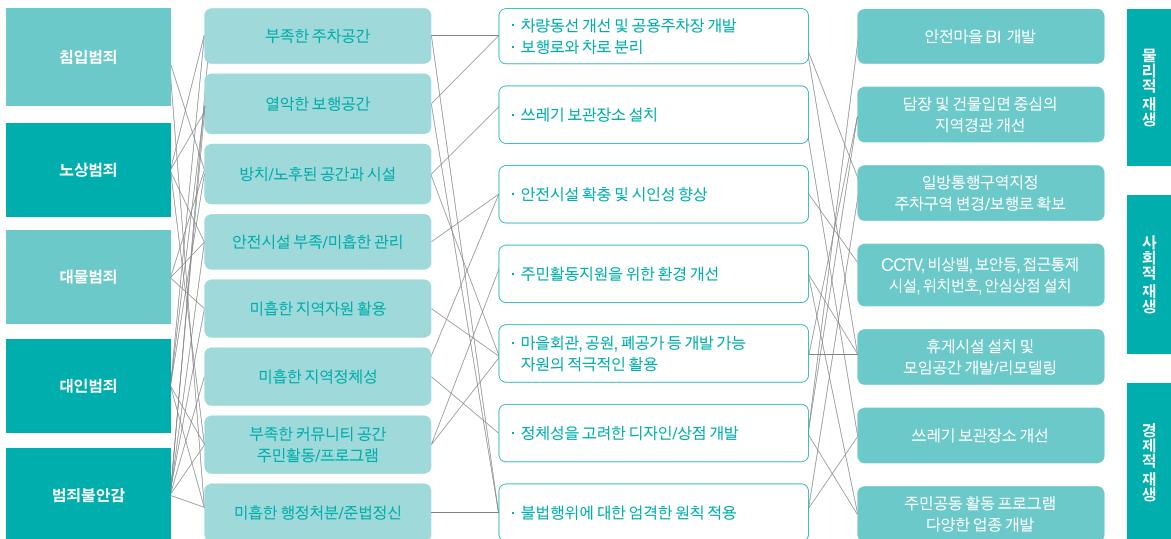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CPTED 원리 및 전략을 물리적 환경과 비물리적 환경의 관점에서 도출하게 된다.

* 2019년 개정된 고시를 기준으로 의무 적용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제1종 균린 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제2종 균린생활시설(다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CPTED 사업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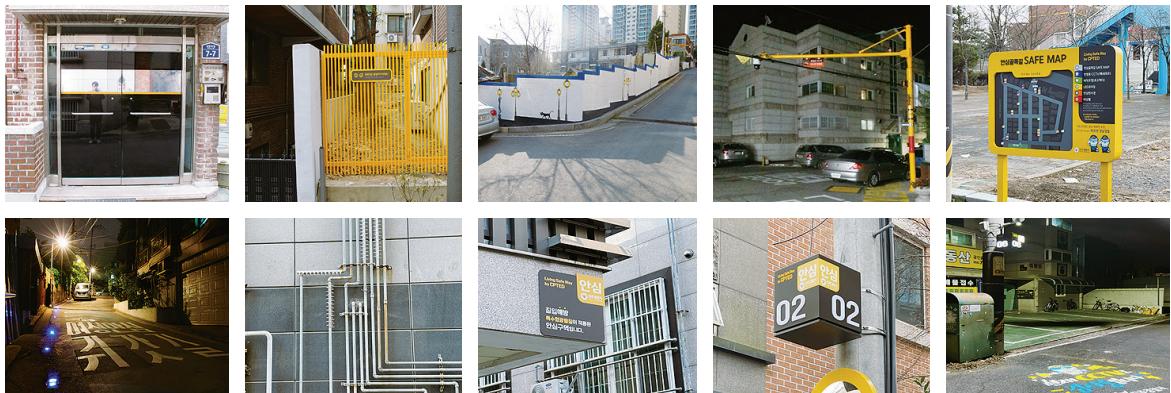


범죄 취약 환경 문제 규명 및 CPTED 전략 도출



물리적인 환경 계획(H/W)에는 취약한 단위공간과 건축물의 개선이나 가로(골목길) 중심의 경관 개선과 방범 시설물 설치 등이 포함되며, 비물리적 환경 계획(S/W)에는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필수적인 주민 활동, 즉 이웃관계 개선이나 지역 활동의 관심 및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교육·축제 등 행사와 자율방범대 활동 등이 포함된다.

전략 실행은 사업 예산과 기간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인데, 현황 분석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 참여하지



국내에서 적용 중인 CPTED 사례

못한 주민들의 생활영역 또는 소유권(재산권)과 관련된 환경 개선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주민의 동의가 필요함에 주의해야 한다.

유지·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된 환경의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또는 매뉴얼 활용이 중요하다. 또한 CPTED 적용 전후 범죄율과 만족도를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향후 사업에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CPTED 사업은 경찰청 추산(2017년 기준) 1,000건 이상 진행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감시를 위한 다양한 조명 및 출입문 반사시트 설치, 접근통제를 위한 외벽 배관 덮개 및 건물 사이공간 출입문 설치, 영역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한 노후 담장과 유휴공간 정비, 각종 안내 시설(고보 조명 포함) 설치, CCTV와 비상벨 같은 방범 시설의 시인성 강화 등은 CPTED 사업의 성과 중 하나로 지금도 현장에서 응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CPTED는 「건축법」에 따른 의무 적용과 인증 기준에 의한 임의 적용이 있다. 건축물의 CPTED 의무 적용 근거는 「건축법」 제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와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6(건축물의 범죄예방)이며, 적용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 범죄예방 건축기준이다.

우리나라의 CPTED 인증은 영국의 SBD(Secured By Design) 인증과 일본의 방범우량맨션(방범모델단지) 인증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한국셉테드학회는 아파트단지·학교·공공시설(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인증(디자인 인증, 시설 및 유지·관리 인증)을, 경찰

청은 준공된 건물 및 공간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원룸, 주차장 포함)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청된 환경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일정한 점수로 통과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CPTED 적용의 효과는 여러 연구 및 보고서에서 확인되는데, 법무부의 법질서 실천 운동 시범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안심마을 시범사업, 그리고 CPTED 인증(아파트단지)은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전반적인 불안감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강석진, 2020). 또한 CPTED 시설물이 설치된 가로에서의 범죄 감소 효과는 뚜렷한데, 특히 개별 시설물의 효과는 성별이나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오하늘, 2023).

K-CPTED의 미래

해외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제도 및 정책 기반이 갖춰지고 다양한 시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건축물의 CPTED 적용도 의무화된 것은 궁정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케이팝(K-POP)과 케이컬처(K-Culture) 등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사회현상에 ‘K’를 붙이고 있는데, K-CPTED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의 해결과 다음 사항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CPTED에 대한 지나친 맹신 또는 본질에 벗어난 환경개선 사업은 범죄예방 무용론 또는 회의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CPTED는 주로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노상범죄, 침입범죄 등)와 불안감 감소에는 효과적이지만, 알코올이나 약물 투여 또는 정신 질환과 같은 비이성적 성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일명 ‘묻지마범죄’) 등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CPTED 원리와 유형별 범죄, 그리고 불안감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또는 상황별 맞춤형 전략을 적용해야만 한다.

학문적 관점에서 CPTED 연구는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 특정 환경(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단편적으로 진행되거나 유사한 연구가 반복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 R&D 지원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연구과제가 감소한 영향, 특히 정책 및 산업구조가 반도체·2차전지·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과 인구변화에 초점을 두고 개편되

면서 CPTED를 비롯한 사회 안전망 구축 연구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과 전문가 양성 등 저변 확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미래기술을 접목한 연구기술 개발도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연구기술개발 지원, 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 및 위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

제도 및 정책적 관점에서는 건축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CPTED 개념이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반영하거나 적절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환경정비 사업도 전문가 부재나 실무자의 경험 부족 문제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향후 건축물 중심의 CPTED 적용 및 효율적인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보완(건축물의 형태 및 공간적 내용 보완, 기준의 구성 등)하고, 전문가나 공무원이 심의 및 인허가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침의 개발도 필요하다(강석진 외, 2023).

최근 법무부에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범죄 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및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주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CPTED 정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CPTED 조례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제정되고, 지역 맞춤형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종합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일명 범죄예방기본법)’의 보완 및 통과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K-CPTED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각종 환경개선 사업에 CPTED 개념을 적용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과 연계된 인증 및 전문 자격 제도 도입, 다양한 계층(어린이, 주민, 공무원, 실무자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인식과 산업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K-CPTED는 어찌면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에 자리매김하고 있을지 모른다. 골목길 곳곳에 설치된 CCTV, 색채 디자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방범 시설과 안내사인, 긴급 상

황 대웅을 위한 비상벨과 112 신고번호(위치 번호), 외벽에 노출된 배관의 덮개, 노후되고 방치된 공간의 정비 등은 외국과 차별화된 K-CPTED 시범사업의 유산이며, 또한 범죄예방 건축기준과 CPTED 인증 역시 K-CPTED의 대표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안전’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CPTED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회적 가치이다. 그런 만큼 무장애(Barrier-free) 인증이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K-CPTED도 기본적이며 중요한 건축도시계획 개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강석진. (2020).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의 효과 및 주민 만족도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6권 11호.
- 2 강석진, 김고원, 서민진, 박승연, 오하늘. (2023). 범죄예방 건축기준과 건축 실무자의 인식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9권 5호.
- 3 오하늘. (2023). 범죄예방 시설물의 정량적, 정성적 효과 분석 연구. 경상국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과제

부영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보호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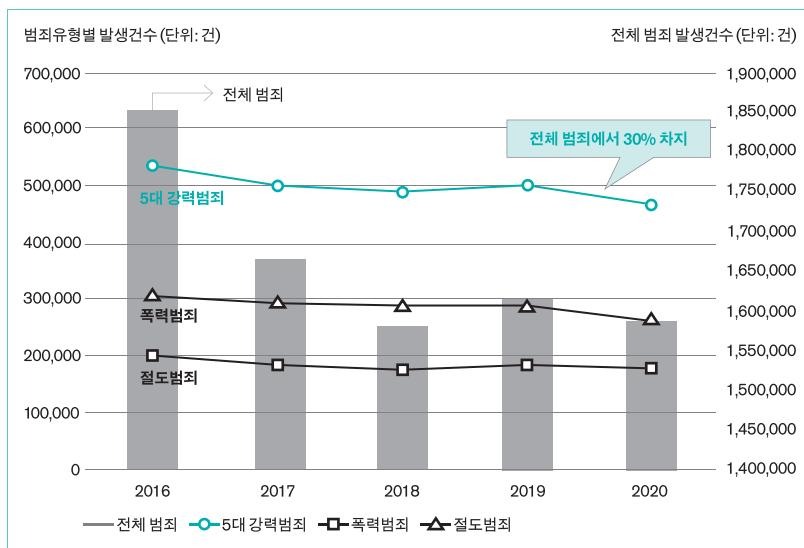
박종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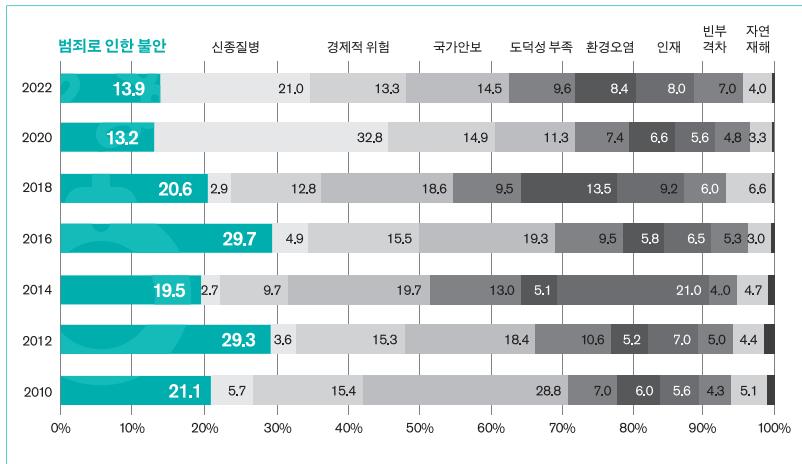
최근 강력범죄 발생이 잇따르면서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5년간(2016~2020) 범죄 발생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여전히 전체 범죄의 약 30%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수치도 지난 10년간 약 25%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

국내 범죄 발생건수 연도별 추이



출처: 손동필 외(2022)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



출처: 손동필 외(2022)

이에 따라 범죄로 발생하는 사후적 손실을 줄이고, 범죄 발생요인들을 제거 및 억제하는 사전 예방 패러다임으로서의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은 범죄예방을 위한 핵심 분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여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CPTED 사업들은 행정·재정적인 문제로 연속성이 떨어지고, 관계기관 간의 소통 부재로 유사 사업이 중복 시행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관계기관에서 시행 중인 CPTED 사업의 조정을 통한 통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추진 과정

2022년 5월 정부는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를 통한 실효성 제고를 법무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

▲
총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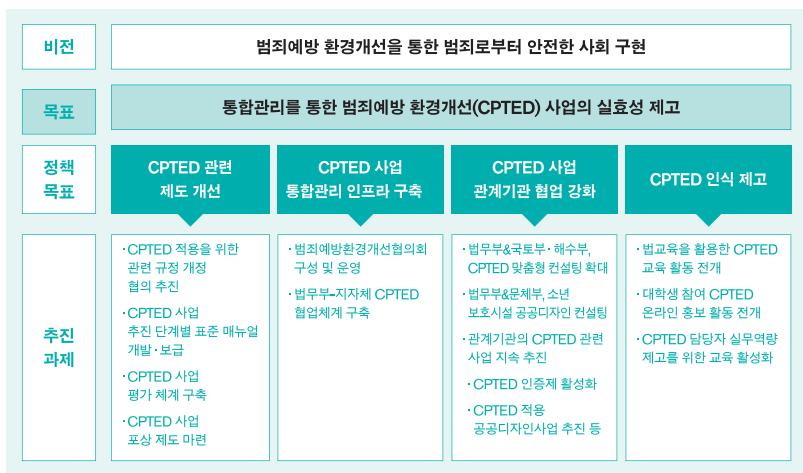
출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이에 CPTED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팀(법무부 보호정책과)을 구성하여 대통령 훈령인 「범죄예방환경개선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였다(2022. 11.). 또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하였으며, CPTED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학·범죄학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이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시행 중인 CPTED 사업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5개년(2023~2027)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2023. 3.).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의 기조에 따라 ‘통합·관리를 통한 CPTED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각 관계기관의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8개 부처에서 4대 추진전략과 19개의 세부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4대 추진과제 분야 중 ‘CPTED 사업 관계기관의 협업 강화’에 대한 세부과제가 전체 과제의 약 50%를 차지하여 CPTED 통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다양한 부처 및 지자체에서 CPTED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각 관계기관 간의 협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출처: 법무부(2023)

추진전략 1. CPTED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먼저 CPTED 관련 규정 내용의 상당 부분(건축, 개발, 사업 분야 등)이 권장사항에 그친바 범죄예방 효과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설비·시설물 중심의 규정 내용에 건축물의 공간·형태·구조·입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방법 시설물 설치에 치중하는 지자체 CPTED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사후 유지·관리 방안까지 단계별 추진 방향 및 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CPTED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가 전무하여 지자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CPTED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정성 지표를 연구 및 개발하여 우수 CPTED 사업에 대한 정부 포상 등의 포상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2. CPTED 사업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

그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CPTED 사업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관계부처의 CPTED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법무부 장관이 의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차관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건축학 분야 등 각종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기관 간의 협의, 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조정하고 있다(「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제2조, 제3조). 이에 따라 1차 협의회를 개최(2023.3.)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2023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였다. 또한 CPTED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지자체와 CPTED 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보 교류 및 사업 추진 현황 파악 등을 위해 법무부와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3. CPTED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CPTED 사업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 및 해양수산부(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즉 국토교통부와 해수부는 개발사업 추진 시 CPTED 적용 필요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법무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컨설팅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CPTED 설계 자료를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낙후된 소년보호시설에 공공디자인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낙후된 시설에 수용된 보호소년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함이다. 아울러 교육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CPTE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PTED 인증제 활성화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사업 추진 ▲CPTED 실효성 제고를 위한 CPO 활동 강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주소정보시설 고도화를 통한 야간 범죄예방 환경 조성 ▲국립부설학교 안전강화사업 확대 등 다양한 고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4. CPTED 관련 인식 제고

그간 CPTED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범죄’라는 용어 때문에 CPTED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선 법무부의 법교육 기반을 활용한 CPTED 관련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CPTED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활동 중심의 청소년 CPTED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법교육 프로그램에 CPTED 교육과정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의 법질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대학생들과 함께 CPTED 온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자체 CPTED 담당자의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편 등 교육강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의 향후 과제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CPTED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들이 제도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을 꼭넓게 발굴하고자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였다. 하지만 CPTED 사업이 제대로 통합·관리되고, 일반 국민이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따라서 우선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된 정책의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수 사례를 포상함으로써 지자체의 사업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현장의 실질적인 CPTED 사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좌우되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CPTED 사업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CPTED의 성과는 사업지역의 범죄율 감소 및 주민들의 불안감 감소로 나타나는 만큼 성과 도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시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법무부. (2023).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 2 손동필, 성은영, 임보영, 허재석. (2022).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법무부
- 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지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실현

김혜진

충청북도경찰청 영동경찰서 경감

영동군 CPTED 사업의 시작

고백하자면 필자는 갑작스러운 인사이동과 함께 생활안전계에서 범죄예방진단(Crime Prevention Officer: CPO) 업무를 맡게 되면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업무 매뉴얼을 다 읽어 보기도 전에 경찰생활 20년을 테스트하기라도 하듯 가장 어려운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다.

영동군이 CPTED 치안-행정 협업 표준화 모델 대상지 전국 3개소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업무담당자인 필자는 CPTED와 관련된 업무 경력이 전무한 상태였다. 게다가 전년도에 추진하던 지자체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업을 추진할 예산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CPTED 표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경찰청에서 건축공간연구원 전문가들을 매칭해 주어, CPTED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무언가는 배울 테고 남는 것이 있을 것이라 나름대로 위로가 되었다.

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표준화 대상지 두 곳과 달리 영동군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CPTED 사업은 경찰의 전담 업무라는 지자체의 인식,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지역 주민의 오해 등 추진 초기부터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 5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한 CPTED 사례를 찾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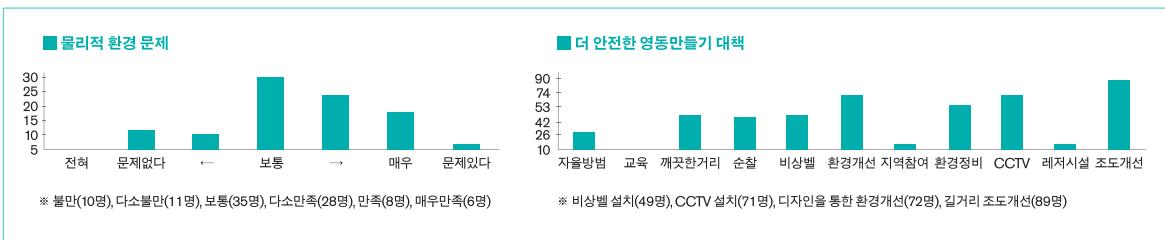


주민 설문조사 진행 모습

어렵다는 건축공간연구원의 의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역의 기관·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CPTED로 부족한 예산 및 3급지 경찰서의 부족한 치안력까지 보완하기로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2022년 당시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영동경찰서는 지역 범죄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공약 건의 과제로 제출하였다. 또한 군수와 군의원 후보, 지역기관·단체와 주민대표를 수차례 찾아가 자세한 설명을 통해 CPTED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가장 주효한 설득의 도구는 통계였다. 대상지인 부용초등학교에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까지 구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때 유효한 설문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CPTED 사업에 대한 설명회 후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동시에 범죄불안감 변화 분석을 위한 사후설문 참여도 함께 부탁하면서 소소한 간식 선물을 전하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였다. 주민 대부분이 CPTED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알리고 설문을 진행하는



주민 대상 설문조사 주요 결과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설문 후 이루어진 주민과의 대화는 이후 CPTED 사업을 설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민이 원하는 CPTED의 시작이었다.

영동군 CPTED 사업의 주요 내용

지역의 치안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치안 담당 인력은 부족한 3급지 경찰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CPTED 사업이 중요한 이유와 표준화 사업 대상지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의미를 전하는 데 주력하였다. 지역의 기관·단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 본 결과 주민의 안전과 환경개선 등 CPTED 업무를 이미 추진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기존 사업들에 치안안전 요소를 추가한다면 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피력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목표 설정과 진심 어린 열정은 냉소적이던 반응을 적극적인 참여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마침내 지역 내 15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전례 없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2022년 6월 16일에는 지역의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마음을 모은 ‘사회적 약자 보호 안심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군 단위 지역에서 CPTED 사업을 위해 소정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에서 다양한 부서와 협업해 충분한 예산을 모으고, 보다 많



사회적 약자 보호 안심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실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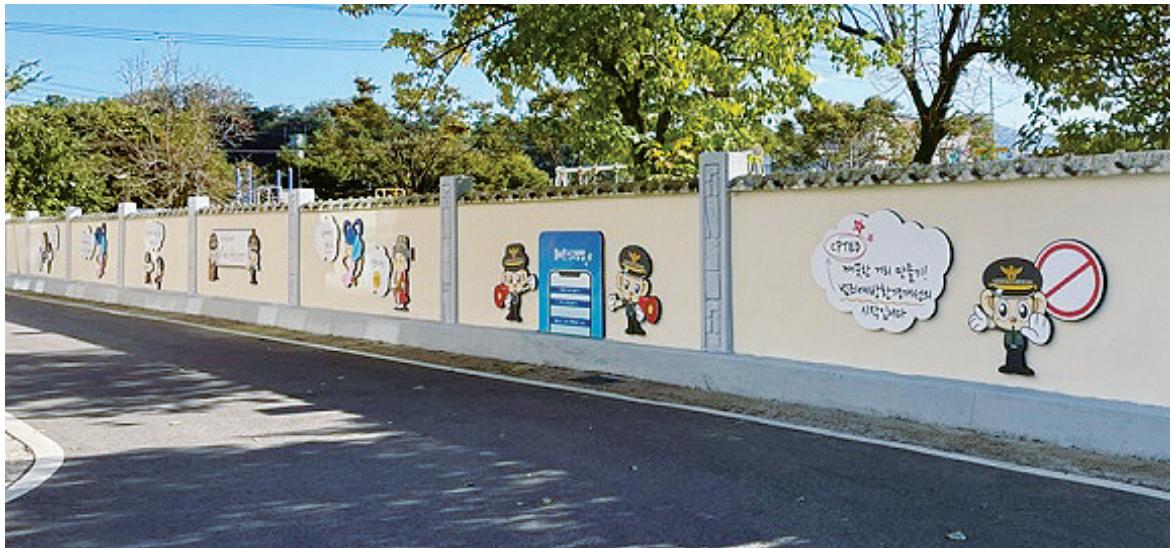


©영동경찰서

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CPTED를 의미 있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되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만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 각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여 CPTED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을지연습 기간 중 지자체 과연 지원으로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렇게 실무자들과 협의하는 동시에 군수 등 기관·단체장과 개별 간담회를 가졌다. 이처럼 CPTED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조직 내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일은 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견고히 할 뿐 아니라, 이후 업무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는데, 이는 CPTED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무렵 영동군의회에서는 지자체와 경찰 간 업무협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가교 역할을 해주며 실질적인 치안행정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여러 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9개 기능, 11개 팀과의 협업이라는 최대 규모의 치안행정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CPTED 사업에서 시작된 치안과 행정의 협업은 긍정적 파생 성과로 연결되어 주민의 안전지수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단체별 역할 및 주요 성과

먼저 영동경찰서는 전체적인 설계를 맡아 다양한 CPTED 요소와 아이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정리하였다. 이때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참여형 CPTED, 주민 스스로 진단하는 CPTED 등을 도입하여 지역사회 의 CPTED 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관·단체 간 협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주체의 역할을 분담하고 조율하였다. 또 사업의 전 과정에서 각 주체들을 지원하고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자료 관리자의 역할도 맡았다. 주민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CPTE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디자인을 직접 제작하거나 위험한 곳을 개선하는 일도 경찰서의 몫이었다.



영동군 CPTED 사업 추진 모습

지자체(영동군)와의 협업은 사업 대상 구간인 통학로에 수년간 방치되었던 건설기계 장비를 비롯해 컨테이너 등 불법적 치물과 야간 가로등 빛을 막던 우거진 수풀이나 나무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협업은 이후 9개 기능, 11개 팀이 확립되는 것으로 이어져 주민 안전을 위한 긍정적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영동군의회는 기관·단체 간 가교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였으며, 경찰과 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업무협의와 담당 업무 조율 등 추진력 확보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2차 추경 시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해 주었다.

© 영동경찰서



유원대학교 YDCP 활동 모습



순찰하는 중앙자율방범대의 모습

교육지원청은 대상지 내 학교들과 함께 예산과 참여형 CPTED가 진행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부용초등학교는 야간에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 영동의 안전을 위해 보안등과 비상벨을 설치하고 위험한 공간을 개선하였고,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또한 통합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차도 구분 공사를 진행하였다. 두 학교 모두 학생과 교직원의 CPTED 교육을 진행하고, 참여형 CPTED의 진행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보탰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홈 CCTV, 창문열림 방지 장치)를 지원하였다. 지역활성화센터와 적십자 희망봉사회는 목공을 직접 배워 제작한 화분에 부용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꽃을 심어 통학로 꽃길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경찰발전협의회는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한 CCTV와 알림판 설치를 지원하였고, 뉴영동라이온스는 최근 급증하는 편의점·무인점포 소액 절도 예방을 위한 안심반사경과 절도 예방 알림판 설치에 도움을 주었다. 청소년육성회는 학생들의 주 통합로인 교차로 주변에 학생보호구역 반사시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생들로 구성된 유원대학교 YDCP(Yeong Dong Campus Police)는 ‘줍깅’* 활동을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주야간 합동순찰을 수행하여 위험한 지대를 파악한 후 CPTED 개선안을 설계하는데 참여하기도 하였다.

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중앙자율방범대는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순찰구역을 확대하고 부족한 치안인력

*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

을 보완하며 힘을 보탰다. 주민대표단은 마을이장 등 주민이 함께하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마을이장 사업비를 이용한 벽화사업 등 추가 협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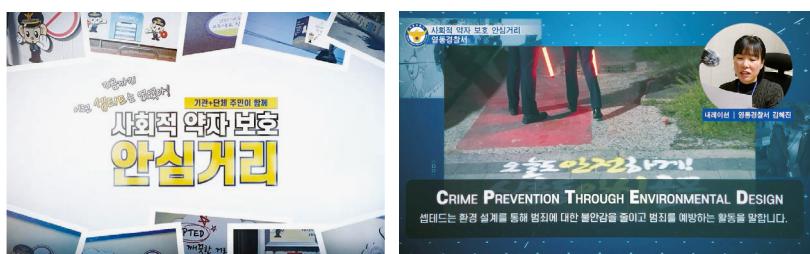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은 3차에 걸친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스스로 진단하는 범죄예방 체크리스트 검수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K-CPTED 사업 모델로서 협업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탐색하다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힘도, 이를 이끌어 나가는 힘도 바로 사람이다. 15개 기관·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까지 노력과 수고로움이 매번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영동경찰서는 CPTED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15개 기관·단체의 활동사항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지역 주체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사후 설문 결과 반응이 좋은 CPTED 아이템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과 추가 개선을 이뤄 나갈 방침이다. 결국 CPTED 사업은 시작은 있어도 끝나지 않는,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지속되어야 할 활동이라고 봄이 맞을 것이다.

치안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치안 인력은 부족한 현실에서 너무나 많은 변수로 인해 이제는 경찰만의 힘으로는 주민 안전을 100%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에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을 고민하고



영동경찰서의 CPTED 활동 홍보영상

출처: 충북경찰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WhdkWetmUzk>)

해결해 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하다. 기존 관(官)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함께 만들어 가는 CPTED 사업이라면 분명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마블의 어벤저스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는 캐릭터만의 고유 능력들이 서로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기관·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CPTED 사업들도 협업을 통해 서로의 능력을 더하는 CPTED로 전환한다면 그 효과는 놀라울 것이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 나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충북경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WhdkWetmUzk>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함께 만드는 K-CPTED 실현 방안

임보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허재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센터의 역할 및 성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대한 개념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이며, 2000년대 이후에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2013년 서울시 ‘소금길’ 사업이 성공모델로 평가받아 CPTED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2015년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정으로 CPTED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건축공간연구원은 2016년 1월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 선정됨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이하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8년간 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되짚어보고, 한국형 CPTED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 지원: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건축공간연구원은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초기에는 건축물 단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지침 연구(2012)’와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연구(2014)’를 수행하며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범죄예방 의무적용 건축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고시가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차 국가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 계획(2023) 수립과 대통령 훈령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제정(2022. 11. 16.) 등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평가지표와 CPTED 사업의 표준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사업 지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CPTED 관련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현장답사, 설계 컨설팅, 사후 평가 및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2014년 추진된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법무부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예시(비상벨 및 방범창 설치, 범죄예방키트 및 홍보물품 지원)
 출처: 손동필 외(2022c, p.66, p.71, p.73)



경찰청 CPTED 사업 우수사례(충북 영동군)

출처: 경찰청, 건축공간연구원(2022, p.66, p.71, p.73).

을 위해 다양한 부처와 협업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원하여 현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초기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법질서실천운동통합모형을 개발하여 지금 까지 법무부와 함께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16년 12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까지 78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범죄 취약계층인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공간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키트와 홍보물품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였다.

경찰청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2005년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2013년 ‘서울시 소금길 조성사업’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과 경찰청은 확대되고 있는 CPTED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201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매년 경찰청과 협업하여 경찰청 CPTED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등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초연구: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사업 지원과 함께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는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CPTED 이론은 제인 제이콥스(1961)의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s)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예방의 이론은 레

이 제프리(1971)와 오스카 뉴먼(1972)을 통해 발전되었다. 따라서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태동한 CPTED 이론 및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한국사회의 실정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CPTED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범죄예방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7개 지역 대상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 모니터링과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2015)',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현황과 평가(2018)',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성 분석 연구(2019)',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2019)',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효과성 분석(2020)'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련 연구를 통하여 CPTED 사업의 모니터링 절차와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사업 대상지의 범죄 데이터를 활용하여 CPTED의 범죄예방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최근에는 CPTED 분야에서의 가상환경과 VR 기술의 적실성을 검증하고 적정기준 및 요소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상환경을 활용한 실험실 기반의 연구 방법은 다양한 환경요인을 통제하고 반복실험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현장감이 낮아 실제 현장과의 괴리감이 존재할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발간물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https://auri.re.kr/publication/list.es?mid=a10316000000&publication_type=paper)



VR을 활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요소 도출 연구 실험 모습

* 실제환경 참조 대상지: 서울특별시 상도로 47길 일원

출처: 손동필 외(2022b, p.31, p.45); 카카오맵(<https://map.kakao.com>)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가상환경은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진보함에 따라 이전과 달리 현실구현도 높아졌으며, VR 기술을 활용하면 현장감과 몰입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가상환경을 활용하여 ‘범죄 두려움 저감을 위한 조도기준(2021)’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요소 도출 연구(2022)’를 수행하며 새로운 CPTED 연구 방법론을 정립하고, 우리나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저층주거지의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도시 설계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였다.

기반 마련: CPTED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2019년부터 매년 경찰청과 공동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퍼런스는 CPTED 사업과 정책연구의 성과를 실무자와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대상으로 발표하여 CPTED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논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2023년 4월에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CPTED 정책 발전 방향’을 주제로 대한건축학회 특별 세션을 개최하여 최근 진행하고 있는 범무부 범죄



2022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좌), 2023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공공기관 세션(우)

예방 정책 및 사업의 방향과 국내외 CPTED 사업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범죄예방환경연구의 향후 과제

CPTED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 ‘서울시 소금길 사업’이 추진될 시기라 할 수 있다. 소금길은 대표적인 CPTED 사례로 소개되었으나 재개발 직전까지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혼적을 찾아볼 수 없고, 이전의 불안감 높은 공간으로 방치되었다. 현재 재개발로 CPTED의 성공 사례로 불리던 소금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경찰청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 전국 지자체에서 CPTED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PTED의 대표 사례로 ‘소금길 사업’이 회자되고 있다. 매년 전국에서 다양한 CPTED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국민에게 소개할 수 있는 대표 사례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는 많은 CPTED 사업이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의 특성이나 지역이 갖는 인구·사회·물리 환경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시설물 설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에 범죄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면서 지자체에서 CPTED 사업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CPTED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녕,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CPTED 사업 추진 방향, 즉 ‘한국형 CPTED’나 ‘K-CPTED’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몇 가지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근거법 제정 지원

현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별도의 근거법이 없으며,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추진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사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CPTED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최근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본법이 부재하여 사업추진의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CPTED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근거법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미 CPTED 사업의 근거법 마련을 위해 2016년부터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를 반복하였으며, 현재도 계류 중인 법안이 존재한다.

이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CPTED 사업의 근거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거법 제정에 필요한 정책 지원 및 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우수 사례 발굴 및 표준 매뉴얼 개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지자체의 역량이나 실무자의 의지 등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많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 있음에도 단순한 CCTV 설치나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지역사회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체감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CPTED 사업에 대한 이해도 차이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으며, CPTED를 단순히 방범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오해하는 실무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CPTED 실무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실무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CPTED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홍보하고 이해도 낮은 실무자도 따라 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 개발을 통해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의 특성에 맞는 K-CPTED 모델 발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불안감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넓게 보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이미 도시재생이나 신활력 증진사업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K-CPTED는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에 법무부와 함께 개발한 위기청소년 지원 모델과 올해 센터에서 집중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CPTED 연구는 K-CPTED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예시이다.

물론 K-CPTED 모델 발굴과 동시에 기존 CPTED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CPTED 사업은 시행에 그치고 있어 사업 이후 범죄율 및 범죄 두려움 변화,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등을 파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이미 추진된 CPTED 사업이 범죄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사업의 효과성은 얼마나 지속되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가 주민 체감도 높은 CPTED 사업, 나아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생활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유광흠, 조영진, 강석진, 김상문, 이경훈, 김철중, 손동필, 양선순. (2015).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건축공간연구원.
- 2 손동필, 성은영, 임보영, 허재석. (2022a).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법무부.
- 3 손동필, 임보영, 허재석. (2022b). 가상환경을 활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요소 도출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4 손동필, 임보영, 허재석, 김연경, 변혜영, 허소영. (2022c). [위기청소년형 시범사업] 2022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수행 연구. 법무부.
- 5 경찰청, 건축공간연구원. (2022). 2022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 자료집, 46-54(2022.12.1.)
- 6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 https://auri.re.kr/publication/list.es?mid=a10316000000&publication_type=paper(검색일: 2023.5.30.)
- 7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검색일: 2023.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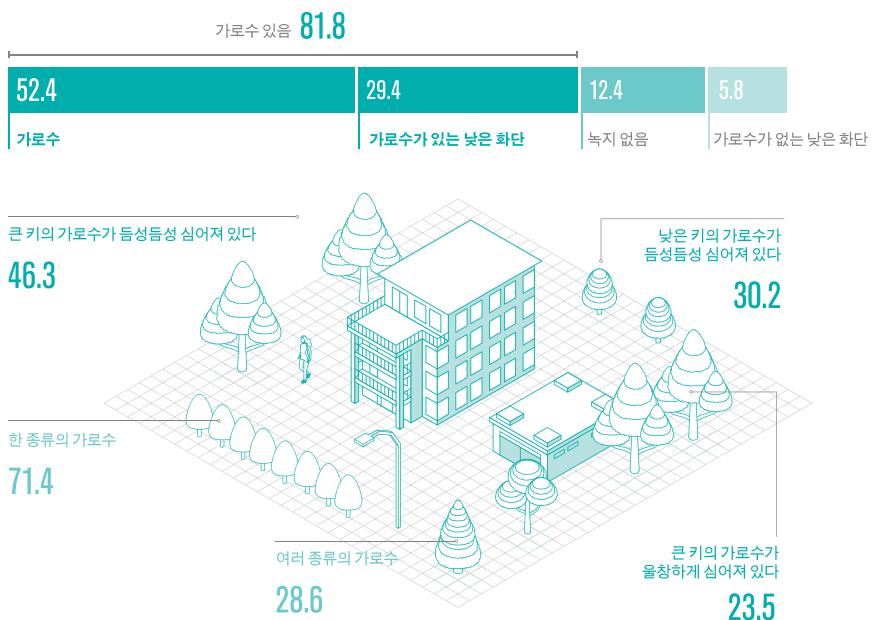
일상에서 만나는 가로녹지, 여러분의 생각은?

건축공간연구원은 비교적 유사한 가로녹지 환경이 분포된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로녹지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2022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6대 광역시와 경기도의 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자료실을 통해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① 거주지 주변의 가로녹지는 어떻게 조성되어 있나?

(단위: %)

거주지 주변의 가로녹지 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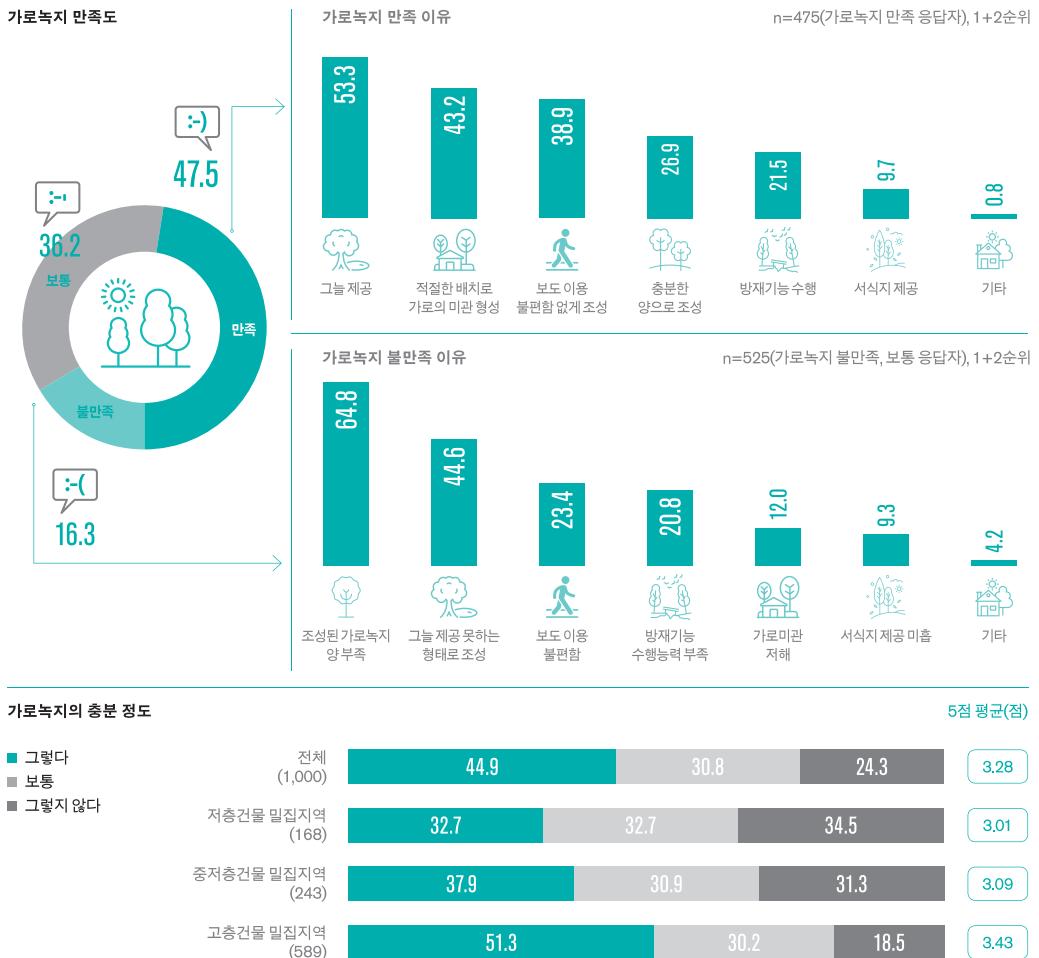


Ⓐ 큰 키의 나무만 심어져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

거주지 주변에 키가 큰 나무인 가로수만 심어져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 이상(52.4%)으로 나타났다. 키가 큰 나무와 화단이 함께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29.4%로 뒤를 이었고, 키가 큰 나무 없이 화단만 조성된 경우가 5.8%, 가로녹지가 없는 경우는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수가 있는 경우는 큰 키의 가로수가 들판처럼 심어져 있다(46.3%)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대부분 한 종류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고 응답(71.4%)하였다.

Q 거주지 주변의 가로녹지에 대한 만족도는?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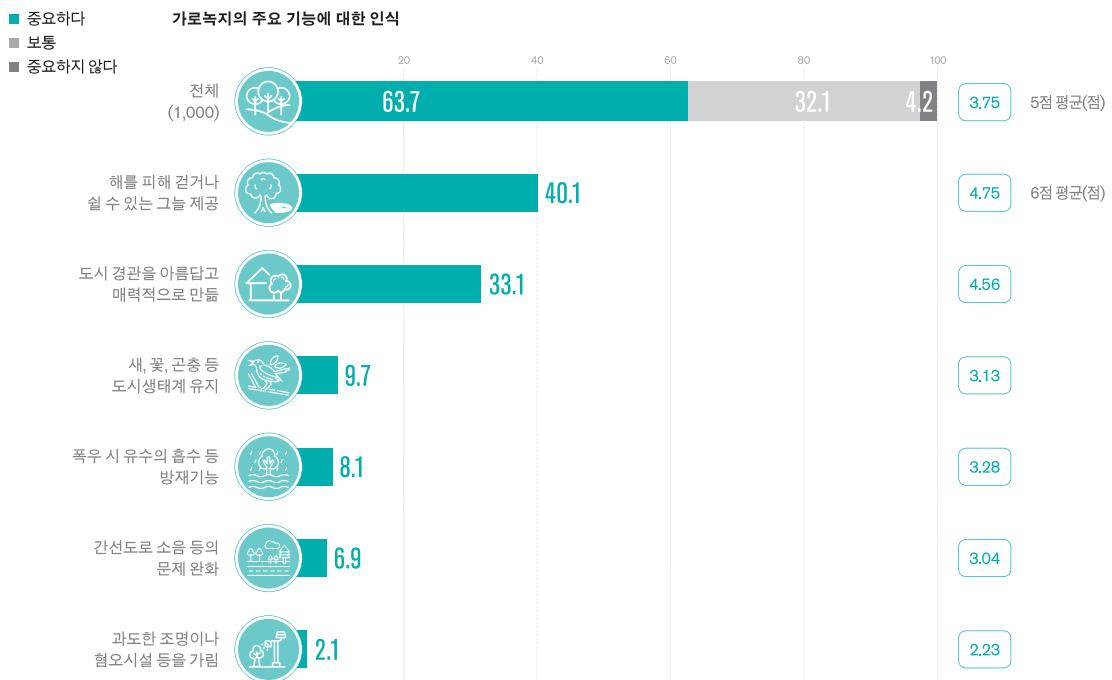


A 가로녹지의 그늘 제공 여부, 보도 이용의 불편함 정도가 만족도에 영향

응답자의 47.5%가 거주지 주변의 가로녹지에 만족하며, 그 이유로 가로녹지가 그늘을 충분하게 제공하여서(53.3%)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가로녹지로 인하여 가로의 미관이 향상(43.2%)되거나 가로녹지가 보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었기 때문(38.9%)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현재 거주지 주변의 가로녹지에 대해 '보통' 또는 '불만족'으로 응답한 사람들은(52.5%)은 '가로녹지의 양 부족'(64.8%), '그늘 제공 못 하는 형태로 조성'(44.6%), '보도 이용 불편함'(23.4%) 등을 이유로 꼽았다. 가로녹지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은 거주지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고층건물 밀집지역에서 51.3%가 가로녹지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 비율(44.9%)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저층건물 밀집지역은 충분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3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Q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로녹지의 기능은?

(단위: %)



A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늘 제공을 가로녹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

다수의 시민이 가로녹지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응답(63.7%)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5%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로녹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해를 피해 걷거나 쉴 수 있는 그늘 제공’(40.1%)을 꼽았는데, 전체 응답자 중 73.6%가 가로녹지 근처에서 시원함을 느낀다고 한 조사 결과와 종합하면 여름철 폭염 또는 무더위에서 가로녹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로녹지의 주요 기능으로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33.1%), ‘도시 생태계 유지’(9.7%), ‘방재기능’(8.1%) 등이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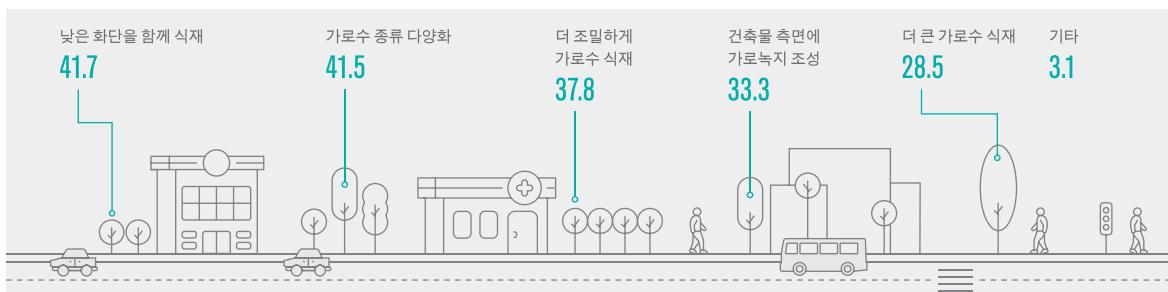
Q 가로녹지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까?

(단위: %)

가로녹지 개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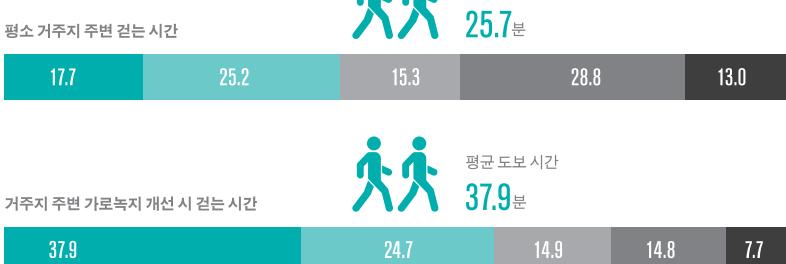


가로녹지 개선 우선순위



가로녹지 개선 시 도보 시간의 변화

- 40분 이상
- 30~40분 미만
- 20~30분 미만
- 10~20분 미만
- 10분 미만



A 다양한 종류의 가로수를 낮은 화단과 함께 조성할 필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54.0%)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가로녹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녹지의 개선 방향은 '낮은 화단을 함께 식재'(41.7%), '가로수 종류 다양화'(41.5%), '가로수 식재 간격 조정'(31.8%), '건축물을 측면 가로녹지 조성'(33.3%) 등 다양한 방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렇게 가로녹지가 개선된다면 40분 이상 걸을 수 있다는 응답자 비중이 20.2%p 증가(17.7% → 37.9%)하면서 응답자 전체 평균 도보 시간이 25.7 분에서 37.9분으로 12.2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로녹지의 개선이 걷기와 같은 시민들의 야외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건축과 도시공간

—

Vol.50

Summer 2023

건축 도시 동향

Trend Report

2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노인들의 지역사회지속거주 방안으로서 ADU(Accessory Dwelling Unit)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프랑스 파리는 도시 광장 재구조화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모두를 위한 공공공간으로 만드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동향으로는 기후변화로 점차 잦아지는 재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주택 차원에서 마련한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또한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보행권 신장을 위해 의료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의 사례를 소개한다.

나시옹 광장 개발 전, 콘크리트 블록을 배치하여
차량으로 폭 개선 주의 상황을 관찰하는 모습



Photo credit: Nathan Dubois

AIA, 2023 도서관 건축상 수상작 Atherton Library



IMPACTE의 첫 번째 프로젝트 Centre Saint-Paul



해외

미국의
지역사회지속거주 방안,
Accessory Dwelling Unit
042

파리 광장
리노베이션 현황과 의의
048

국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
052

더욱 안전한 보행을 위한
인천형 공공디자인
'Hospital zone'
056

미국의 지역사회지속거주 방안, Accessory Dwelling Unit | ADU는 가족친화 및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 형태로,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 부지에 고령 친화 설계로 독립생활이 가능한 본채보다 작은 규모의 별채를 지어 거주하고, 본채를 자녀 또는 가족에게 주어 각 가구의 독립성을 높인 가족친화적 돌봄의 형태를 갖거나, 별채를 제3자 또는 간병인에게 임대하여 경제적 이점을 얻는다.

파리 광장 리노베이션 현황과 의의 | 광장은 그 융통성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광장의 성격을 살리려면 앞으로 그 장소를 사용할 지역구 시민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이란 재해에 대한 기후노출이나 도시민감도를 고려하여 현재 및 미래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기초로, 도시 내 재해 위험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 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을 수립하는 적응 전략계획을 말한다.

더욱 안전한 보행을 위한 인천형 공공디자인 'Hospital zone' | '보행약자가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선 보행약자들의 통행이 많은 의료시설 주변에 최상의 보행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병원·요양원 등 환자 및 보행약자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무장애디자인 등을 적용하여 보행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찾기 쉬운 디자인을 개발 및 보급한다.

미국의 지역사회지속거주 방안, Accessory Dwelling Unit

윤진희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안정된 주거와 돌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인구 고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노년'으로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 고령자는 집과 시설로 양분화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주거와 돌봄 서비스의 수요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새로운 예방적·통합적 주거 및 돌봄의 형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국에서 새로운 노년층의 거주와 돌봄의 대안으로 Accessory Dwelling Unit(ADU)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고령자의 지역사회지속거주(Aging In Place: AIP)의 새로운 방안으로 ADU가 등장한 배경 및 개념, ADU 확산을 위한 지역별 규제완화 정책 등을 살펴보자 한다.

인구고령화와 지역사회지속거주 방안으로의 ADU

ADU는 기존 단독주택 등의 부지에 본채보다 작은 규모로 지어지는 독립형 주택을 의미한다. 주방과 욕실 등이 설비되어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이 주택의 유형은 미국에서 그리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ADU는 20세기 초에 큰 인기를 끌며 미국 전역에서 보조 아파트(accessory apartments) 또는 보조 스위트(secondary suites) 등의 이름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교적 일반적이지 않은 주택 유형이 되었고, 교외 개발과 함께 많은 지역에서 용도구역 설정(zoning) 등을 통해 금지되었다. 이렇게 ADU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하였지만, 최근 들어 여러 지역에서 앞다투어 ADU 관련 법률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규제들을 완화, 개정하면

서까지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유형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ADU 등장 배경

ADU의 재등장에는 여러 사회·경제적 이유가 존재한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위기이다. ADU의 경우 기존 부지를 사용하여 본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을 짓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저렴한(affordable)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ADU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ADU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은퇴인구의 증가와 고령자 주거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2020년 기준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6.8%(약 5,500만 명)로 현재 미국은 고령사회 국가이다. 2040년 예상 고령자 비율은 22%로 미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의 고령인구 또는 미래의 노인인구가 바라는 노년의 삶은 자신이 살아온 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다. AARP(2022)에 따르면 성인의 67%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63%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최대한 오래 거주하며 나이 들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AIP에 대한 수요는 50세 이상에서는 약 77%, 65세 이상에서 85%로 나타났다(AARP & Hannon, 2021).

2022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약 8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주택 소유의 32.1%를 차지한다.** 대부분 교외지역에 큰 주택을 소유한 노인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물리적으로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작은 규모 또는 무장애설비(Barrier Free) 등 고령친화 설계가 된 주택으로 이동하기에는 자신이 살아온 커뮤니티를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 게다가 은퇴 후 소유한 주택 자산 외 수입이 현저히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 기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대한 불안감과 향후 돌봄 또는 요양 서비스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 2019).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ADU이다. ADU를 가족친화 및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 형태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 부지에 고령친화 설계로 독립생활이 가능한 본래보다 작은 규모의 별채를 짓어 거주하고, 본래를 자녀 또는 가족에게 주어 각 가구의 독립성을 높인 가족친화적 돌봄의 형태를 갖거나, 별채를 제3자 또는 간병인에게 임대하여 경제적 이점을 얻는다.

ADU는 이러한 방식으로 높은 주택 가격에 부담이 있는 자녀 및 손주 등 가족 구성원에게 본래(또는 ADU)를 열어주어 가족돌봄을 가능하게 하거나, 제3자 또는 간병인에게 임대하여 지역돌봄서비스 비용을 충당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거주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지속거주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각 가구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고령자가 거주하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며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길어진 기대 수명만큼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실현 가능성

*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해당 국가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후기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로 구분함(박정호, 2015, https://ie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292, 검색일: 2023.6.4.);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

**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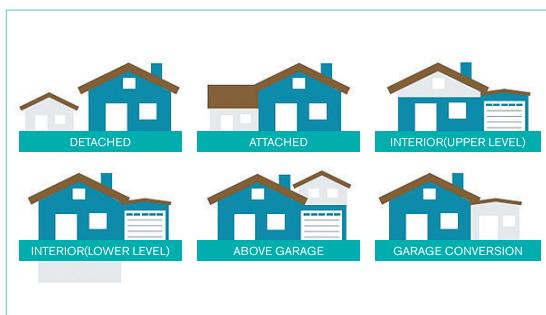
을 함께 고민하는 고령자 사이에서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요양시설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주택시장이 긴축되면서 강해졌고, 퇴직 후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절감이 필요한 미국 대부분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주택 부지에 ADU를 건축할 때 드는 비용이 동일한 크기와 비슷한 편의 시설을 갖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비용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도 큰 이점이다. 또한 ADU 건축과 기존주택 개조에 드는 비용에 유급 돌봄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을 더해도 비슷한 환경의 시설 입소보다 저렴해 고령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노인에게는 기존의 시설 돌봄을 대체하고 기본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AIP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모 및 노인 부양에 추가 자원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들과 정부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점이 있다.

2018년도 AARP 설문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 성인의 67%가 ADU는 ‘소중한 사람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방법임과 동시에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응답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3분의 2가 일상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ADU를 건축할 계획이 있다’고 답하였다. 해당 설문조사의 2021년 ADU 관련 질문에서는 ADU를 ‘돌봄이 필요한 가족(86%)’ 또는 ‘친척이나 친구(86%)’를 위한 장소, ‘간병인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67%)’나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추가 수입(63%)’을 얻을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배치 형태에 따른 ADU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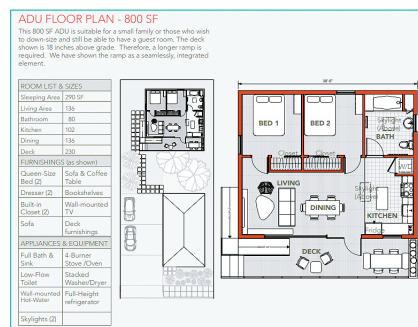
출처: AARP(2021)

기존 주택과의 배치 형태에 따른 ADU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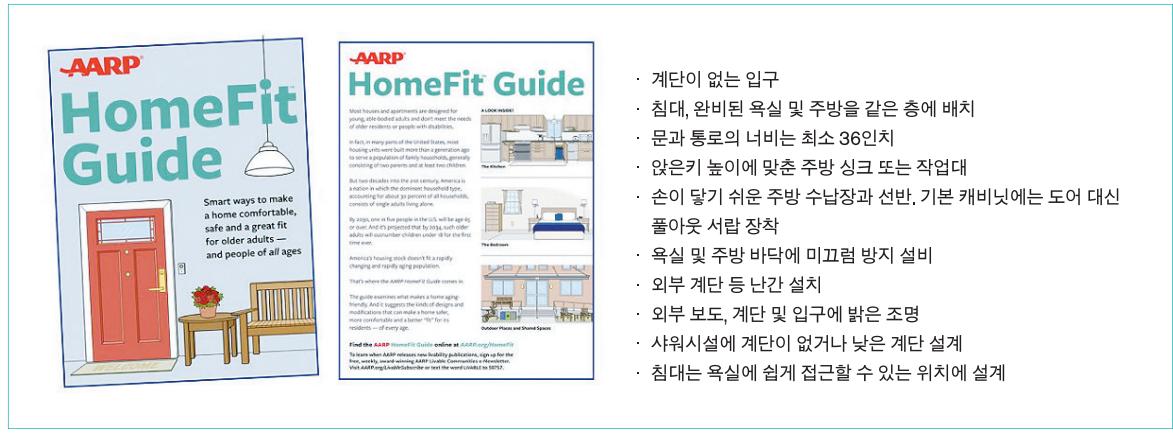
ADU는 기존 주택과의 거리 및 배치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AARP et al., 2019a). 분리형 (Detached) ADU는 ADU 건물이 기존 주택에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거주 가구들의 독립성 및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특히 기존 주택과 분리된 형태로 건축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또는 차고의 품질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지



AARP의
ADU 개발 및
디자인
가이드
출처: AARP et
al.(2019b)



ADU
평면도 예시
출처: AARP et
al.(2019b)



AARP Home-Fit 디자인 가이드

출처: AARP et al.(2019b, p.48)

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부착형(Attached) ADU는 기존 주택 또는 차고 등과 같은 다른 구조물에 부착된 형태로 단독주택과의 연결에 있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인접한 벽의 안전성을 위해 공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ADU는 주방 또는 간이주방, 욕실 및 수면공간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크기에 따라 거실 및 추가의 수면공간을 둘 수 있다. 거주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고령자를 위한 ADU는 무장애공간(Barrier Free)으로 미끄럼 방지, 난간, 밝은 조명 등의 고령친화 설계가 포함된다. AARP에서 제공하는 Home-Fit 디자인 가이드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전 연령 친화 설계의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ADU 관련 법안

주택시장의 안정화 및 고령자의 새로운 주거 및 돌봄 서비스를 위한 대안으로 ADU와 관련한 기존의 많은 규제가 완화되고 새로운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 물론 ADU 설치에 따른 이웃 주택과의 프라이버시 문제, 안전 문제, 인구 밀도의 증가 및 주차 문제 같은

- 계단이 없는 입구
- 침대, 완비된 욕실 및 주방을 같은 층에 배치
- 문과 통로의 너비는 최소 36인치
- 앉은 키 높이에 맞춘 주방 싱크 또는 작업대
- 손이 닿기 쉬운 주방 수납장과 선반, 기본 캐비닛에는 도어 대신 풀아웃 서랍 장착
- 욕실 및 주방 바닥에 미끄럼 방지 설비
- 외부 계단 등 난간 설치
- 외부 보도, 계단 및 입구에 밝은 조명
- 샤워시설에 계단이 없거나 낮은 계단 설계
- 침대는 욕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계

우려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문제 가 심각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ADU 관련 기준 규제들이 완화 또는 개정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주택 공급 및 가격 문제가 가장 심각한 캘리포니아가 ADU 합법화 추진의 최전선에 있으며, 오리건·워싱턴·매사추세츠·콜로라도·버몬트·하와이 등도 ADU 관련 규제 완화와 개발 장려 보조금 및 인센티브 등 관련 법안을 시행 중에 있다.

ADU와 관련한 용도구역 설정 허가 및 법률은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그러나 ADU 허가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정들 중 ①주차공간과 ②실소유자 거주 기준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AARP et al., 2019b).

ADU 건축 허가는 기존 거주지에 새로운 가구가 전입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지역에서 더 많은 주차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추가적 주차공간 관련 조항은 ADU 건축 허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워싱턴주 시애틀과 오리건주 애슬랜드는 각각의 ADU에 노외주차 공간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도 ADU 당 1

대의 노외주차 공간을 요구하나, 용도구역과 대중교통과의 거리에 따라 그 규정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위싱턴 D.C.는 별도의 주차공간을 요구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는 ADU의 0.5마일 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ADU당 1대의 노외주차 공간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어느 주택 유형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실소유자의 거주 조건은 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기존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주택의 투자 측면에서 매우 예민한 요소로 작용한다. 오리건주의 애슬랜드, 위싱턴주의 시애틀, 콜로라도주의 덴버는 실소유자 거주를 조건으로 ADU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는 ADU 건축 시 실소유자 거주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같은 오리건주 이지만 포틀랜드의 경우 실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구원 중 한 명은 소유자의 혈연 또는 법적 가족이어야 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최소 부지 크기, 용적률, 높이 제한, 허가 고려 시간 등 ADU의 합법화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및 법률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같은 주내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나, 가장 신속하게 ADU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예로 ADU 관련 법규 재정 및 개정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중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캘리포니아 ADU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 2017년 ADU 관련 첫 번째 조치: SB 1069(Wieckowski), AB 2299(Bloom), and AB 2406(Thurmond)
 - 기존의 주차 의무 사항(대중교통이 1마일 이내에 있는 경우 추가 주차 공간 요구) 제거
- 2019년 새 ADU 법안 통과: Assembly Bill 881, Assembly Bill AB 670, Senate Bill 13, and Assembly Bill 68
 - ADU 개발 제한을 위해 사용하였던 최소 부지 크기, 용적률, 공터 기준, 기존 차고가 ADU로 전환될 때의 요구사항 등의 규정을 제외

- 및 축소하여 ADU 개발을 수월하게 함
- 허가신청 고려 시간 60일로 단축
- 실거주 의무사항 5년간 제외(입법부 결정하에 연장 가능)

• 2023년 NEW AB221 ADU 법안

- 이전 ADU 관련 법률의 오해 소지를 줄이고 명확히 하여 ADU 개발을 수월하게 함
- 높이 제한 재정의: ADU 높이 제한 최소 16피트로 변경. 각 도시는 최대 높이에 대한 제한을 가질 수 있지만, ADU를 더 낮게 건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더 많은 ADU 생산이 가능하게 됨. 추가로 16피트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규정 추가

상황별 조건	ADU 높이 제한
ADU가 기존 주택에 붙어 있는 경우(Attached)	25ft*
대중교통이 0.5마일 이내에 위치	18ft
2층 높이의 다세대주택에 짓는 경우	18ft
위의 상황 조건이 아닌 모든 경우	16ft

* 해당 용도구역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60일 규칙의 변경 사항: 기존 ADU 허가는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가 되어야 했는데 이는 ADU 개발 장력을 도왔지만, 허가 승인 건수가 급증하자 해당 부서에서는 60일이 지나면 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시작함. 이에 신청 거부 시 거부된 이유를 모두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정
- 프런트셋백(Front Setback) 관련 규정: ADU가 800평방피트 미만인 경우 프런트셋백 규정으로 인한 건설 허가 거부 불가
- 다가구주택 규제 완화: 기존 다가구주택 ADU 건설 시 동시 건축 제한이 불가능하였으나 조항 삭제, 동시에 건축 제한 및 건축 가능
- Government Code 50678 규정을 추가하여 ADU와 JADU(Junior Accessory Dwelling Unit) 모두 건설 및 유지 · 관리 자금 지원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 수립하도록 요구

• 2023년 New SB-897 ADU 법안

-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필수 설치 기준 제거
- 기존 ADU 건축을 막기 위해 차고 철거 허가를 보류하는 경우가 있어 ADU 건축이 허가되더라도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음. 이에 ADU 허가가 날 경우 차고 철거 허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개정

• 2023년 기타 ADU 법안

- AB 221과 SB-897 외 직간접으로 ADU 개발과 관련한 법률
- AB 916 ADU 법안: 기존 주택 단위에 침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 필요가 없도록 함. 즉 지역 관할권에서 차고, 다락방, 지하실 및 기타 조건 없는 공간을 침실로 전환하도록 할 수 있음
- AB 157 ADU 법안: 4만 달러 CalHFA(California Housing Finance

Agency) 교부금으로 ADU 건설 대출 용이하게 변경
- AB 561 ADU 법안: 정비 지원 ADU 금융 프로그램으로
은행·신용조합 및 기타 모기지 발행인이 주택 소유자에게 기존 연방
지원 대출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 대출을 하도록 권장하게 함으로써
ADU에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의 이율을 낮춤

출처: Poole Shaffery(<https://www.pooleshaffery.com/news/2020/september/the-state-of-california-moves-to-allow-accessory/#:~:text=In%202019%20significant%20new%20ADU,as%20of%20January%201%2C%202020>), LEVI Design Build(<https://leviconstruction.com/new-adu-laws-in-2023-everything-you-need-to-know/>)

맺음말

대부분의 노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 또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돌봄의 형태나 비용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발생과 팬데믹 기간 드러난 시설 요양의 문제점은 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시설 요양 대안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등장한 것이 ADU이다.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들뿐만 아니라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시설요양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지속거주를 위한 다양한 지역기반 돌봄서비스들이 나오며 주목받고 있다. 미국보다 아파트 거주 비율이 현저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ADU가 최적의 방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의 부양 또는 시설에 의지하던 기준의 고령 주거복지와는 다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임에 틀림 없으며, 다양한 수요와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필요 한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ADU 사례가 단독주택을 소유한 노인, 특히 소득이 매우 낮고 주거최소기준 이하의 낡은 주택에 거주하나 그 주택 소유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수의 농어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소유 주택을 활용하여 AIP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 박정호. (2015).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클릭경제 교육. KDI 경제정보센터. https://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dix=2292(검색일: 2023.6.4.)
- 2 AARP. (2021). AARP Model State Act and Local Ordinance.
- 3 AARP. (2022). Home and Community Preferences Survey.
- 4 AARP, Spevak, E. & Stanton, M. (2019a). The ABSc of ADUs: A Guide to Accessory Dwelling Units and How They Expand Housing Options for People of All Ages.
- 5 AARP, Harrell, R. & Guzman, S. (2019b). Accessory Dwelling Units: A Step by Step Guide to Design and Development.
- 6 AARP & Hannon, C. (2021). Accessory Dwelling Units: Model State Act and Local Ordinance.
- 7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 (2019). Housing America's Older Adults 2019.
- 8 LEVI Design Build. New ADU Laws In 2023 ? Everything You Need To Know. <https://leviconstruction.com/new-adu-laws-in-2023-everything-your-need-to-know/>
- 9 Poole Shaffery. The State of California Moves to Allow Accessory Dwelling Units (ADU) on Almost Every Residential Property. <https://www.pooleshaffery.com/news/2020/september/the-state-of-california-moves-to-allow-accessory/#:~:text=In%202019%20significant%20new%20ADU,as%20of%20January%201%2C%202020>

파리 광장 리노베이션 현황과 의의

유무종

프랑스 건축사, 도시설계사

파리의 심장을 바꾸는 7개 광장의 변화

광장은 도시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 파리의 광장은 시민들의 의견과 쌓여 온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협회가 자신의 의지와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한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지만, 파리 시민들은 평소에 광장의 목적을 시위나 집회에 두지 않는다. 빈 공간을 여가와 사색 그리고 산책을 위한 장소로 인식하고 사용한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파리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도심 속 주요 7개의 광장을 재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도 그 과정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의 필요에 맞추어 미래를 대비하는 그들은 어떠한 형태의 광장을 만들어 가고 있을까?

광장 재건축의 목표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공간이라는 새로운 용도에 맞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부드러운 이동성과 대중교통 사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요구 사항을 고려한다. 그리고 광장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 맥락을 회복한다. 동시에 혁신적 디자인의 가구를 설치하여 스포츠·문화 및 예술 활동 그리고 휴식을 돋는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정원의 기능을 갖추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바스티유 광장, 나시옹 광장, 광테옹 광장, 감베타 광장, 마들렌 광장, 데 페트 광장 그리고 이탈리 광장 등처럼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을 파리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이번 재건축의 목표이다. 모든 장소에 통용되는 공통된 목표는 협의를 통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났으며, 그들은 평화롭고 다양한 쓰임의 장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전례 없는 집단적 접근

이들 광장의 변화의 시작은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광장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조사는 시민 참여와 예측에 기반한 혁신적인 접근의 대상이 되었다.

2015년부터 광장 재건축을 위한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각 지역구 시청에서는 그곳에 열릴 광장의 계획을 전시하였다. 동시에 지역 주민, 이웃 의회, 보행자 협회와 함께 수행되는 협의의 일환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자전거 이용자와 장애인, 노약자 등의 공간 이용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8,500명의 시민이 150회의 회의와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7개의 광장을 두고 ▲더 많은 초목과 보행자를 위한 공간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호된 공간 등 2,000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원하는 바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파리시 도시 관련 부서는 역사문화유산 및 교통과 같은 여러 주제에 대해 파리교통공단(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RATP) 부서와 협력하여 광장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2017년 건축가, 조경가, 민족학자, 젠더 및 통합 전문가로 구성된 4개 그룹이 파리 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공동 설계하고 건설하도록 위임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각 구역의 거주자 및 주민협회와 함께 광장 디자인을 위한 개별 인터뷰, 디자인 워크숍, 탐험 산책, 가구 제작을 수행하였다.

즉 그들은 3년 동안 공통점이 있는 장소(사례들)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그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진 셈이다. 이는 지역적이면서 국제적이고 독특하면서도 보편적인 그들의 삶을 콘퍼런스와 세미나를 통해 미래의 광장에 함께 투영하는 것이었다.

전문가 그룹과 참여 시민들은 아이디어를 공공장소에서 테스트하고, 관찰하고, 듣고, 조정하였다. 예를 들어 나시옹 광장의 경우, 도로 공간을 점유하여 광장 중앙의 녹지면적을 늘리기 위해 콘크리트 블록을 배치하여 도로 폭을 줄이고 교통 문제의 결과를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는 콘크리트 블록이 차량 통행으로부터 소음을 방지해 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의 매립된 부분이 자전거를 배우거나 연습하기 위한 젊은 층에 인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음을 감

©Mairie de Paris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광장 재건축을 위한 세미나

©Nathan Dubois



나시옹 광장 개발 전, 콘크리트 블록을 배치하여 차량도로 폭 개선 후의 상황을 관찰하는 모습

소시킬 수 있는 가장자리를 도로 옆에 배치하고 도로 폭을 줄이는 것으로 프로젝트 계획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롤링 트랙에서 파리 시민들이 조깅을 즐기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이렇듯 파리시는 참여하고 실험하는 방식을 통해 현재 사용에 기반한 변화를 수용하고, 예상해야 하는 미래 사용을 예측하고, 모든 사람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는 공공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광장 재건축 사업진행 타임라인

2015년 6월 17일	파리 공의회의 프로젝트 목표 및 협의 양식 채택
2015년 6월 20일	바스티유 광장에서 안 이달고 시장이 현장 조사 시작
2015년 9월 25일	규제 협의 종료
2015년 겨울	7개소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2016년 4월	사전 상담 종료
2016년 6월 20일	파리이사회 협의보고서 승인
2016년 7월부터	공동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 광장마다 전문가 지정 및 점진적 배치
2016~2017년	세부 연구 구현, 공동 건설, 행정 승인 요청 및 기업 상담
2018~2019년	장소에 따라 도로 공사 시작

국내의 시사점

최근 국내에서도 광장 재조성이나 차 없는 거리에 관한 공모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의 광장은 단순한 도심 속 빈 공간을 떠나 필요한 도시 인프라를 채우고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별로 ‘광장을 개선하여 어떠한 삶의 형태를 만들고자 할 것인가’에 대한 저마다의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저마다의 생각과 관점을 한곳에 모으는 플랫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

람이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기능을 어디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광장이 내가 사는 지역과 도시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과연 나의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한 물음을 도시민에게 갖게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즉 전문가의 시선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답해야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저 예쁜 혹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형태의 광장이나 시설들이 즐비한 눈요깃거리 정도의 행사에 그치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맞는 시설의 확보, 스타트업이나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딛고자 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공간 등 우리가 광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광장은 그 융통성을 활용하면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광장의 성격을 살리려면 앞으로 그 장소를 사용할 지역구 시민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파리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와 정책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문가들 역시 세미나를 통해 때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때로는 지식을 공유하는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반영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파리시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다. 나아가 실제 생활에서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 사업 변경의 폭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보다 현대의 요구에 맞는 시설과 디자인을 고려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돋고 있다.

이처럼 파리시는 함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광장별로 편성된 전문가들이 관련 구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아틀리에

모두가 완전히 참여하는 접근방식을 설정하려 하였다. 7개 광장의 재건축은 파리 시민과 이용자들이 이러한 공간의 재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제시되었다. 시민들은 건축가, 조경가, 민족학자, 통합 전문가로 구성된 팀과 함께 도시를 경험하고 미래 장소의 일상을 재창조하며 재생 불가능한 것을 제한하고 가능한 모든 것(물리적 부분과 역사적 맥락과 같은 관념적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었다.

도시 관련 사업은 시민들과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내일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생각과 확신 속에 파리시 광장 재건축 프로젝트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많은 국내외 도시 관련 사업, 특히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에 있어 전문가와 사용자 그리고 담당기관의 협력 및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 Mairie de Paris . (2016). Bilan de la concertation – brian global. <https://cdn.paris.fr/paris/2019/07/24/cbad880cc256a0a669bd98084fa75af.pdf>
- 2 Mairie de Paris . (2016). Bilan de la concertation – synthèses détaillées par place. <https://cdn.paris.fr/paris/2019/07/24/a7d3427114c64ae01ef27760c8c349ac.pdf>
- 3 Mairie de Paris . (2016). Tout savoir sur les projets de réaménagement des sept grandes places parisiennes. <https://cdn.paris.fr/paris/2019/07/24/ce5f00d2662876850a3badd0a42e72a.pdf>
- 4 Mairie de Paris, Apur, Les Docks. (2015). Réinventons nos places(Brochure). https://www.apu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documents-associés/Brochure_seminaire_places_29mai2015_0.pdf?token=ArYs2V0O
- 5 파리 도시계획과 홈페이지. <https://www.apur.org/fr/nos-travaux/reamenagements-7-places-parisiennes>

종합적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 필요성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가 본격화되면서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8일 서울 관악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 등 일대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동작구 신대방동은 시간당 141.5mm를 기록하여 일강우량 약 109년 빈도, 시간당 강우량 약 489년 빈도에 해당하였다. 이 집중호우로 도시 하천이 범람하고 주택·지하철·도로 등은 침수되었으며, 서울에서만 모두 8명의 인명피해와 약 68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도시화의 진행과 취약주택 상존으로 도시에서 특히 가중되고 있다. 도시 지역의 인구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91.8%를 상회하였고, 시가화 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의 면적은 2008년 3.32%에서 2021년 4.07%로 꾸준히 증가하여 빗물이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노후주택 비율은 높아지고 지하층 주택은 약 34만 8,000가구(2022년 주거실태조사)로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자연재해 대책은 주로 홍수 방지 등을 위한 하천·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반지하주택과 쪽방 등이 상존하는 도시 환경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는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높여 자연재해에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형 도시계획부터 재해취약주택 해소까지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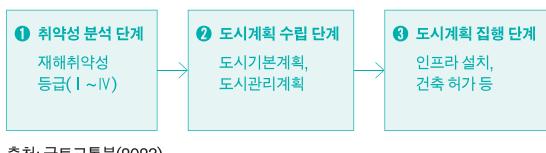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이란 재해에 대한 기후노출이나 도시민감도를 고려하여 현재 및 미래의 취약성을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

김기훈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

방재 관련 도시계획 체계



평가하는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기초로, 도시 내 재해위험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을 수립하는 적응 전략계획을 말한다.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을 계기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5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개정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고, 도시계획 시에는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방재 등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침수피해 지역의 재해취약성 등급은 실제 나타난 피해 규모와 매칭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에는 안전에 관한 내용이 선언적인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현행 도시계획은 최근의 극단적인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 대응을 고려하고자 한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최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방법을 고도화하고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특히 분석단위·분석지표·평가방식 등 분석방법을 정비(격자 단위 분석, 중요도에 따른 분석 지표 정비 등)하여 취약성 정보를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방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해취약성 1·2등급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실행으로 연계될 수 있는 취약등급별·재해유형별 차

등화된 부문별(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전국 단위의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분석, 지역 설정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 및 재해 관련 통합정보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도시 방재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재해취약지역 정비 지원 및 방재시설 확충

기존 재해취약지역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또는 건축물 신축을 통해 재해에 안전한 지역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이나 지정되면 재해예방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이 조례로 제한되고 개발 시에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 사실상 규제 중심의 제도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재지구에서 건축 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당 용적률의 1.2배 → 해당 용적률의 1.4배, 재해저감대책 이행 전제)하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 입안 요건 등도 개선하여 취약지역 정비를 유도한다.

한편 재해 위험에 노출된 낙후지역은 재해방지 시설 설치 등을 직접 지원한다. 달동네·판자촌 등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이나 주민복지 등을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4년 사업 대상에 재해취약지역을 포함하고, 기존 생활 인프라 지원 외에도 방재시설 설치와 건축물 안전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재해 위험도가 높은 상습침수구역 등에 재해저감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도시재생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학교와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전

반인 도시 재해예방을 위한 거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세부 조성기준을 구체화하고, 재해저감 기능을 갖춘 방재공원이 도시 곳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방재공원에 대한 입지 등 세부설치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지하보도와 공동구 등 주요 지하시설물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2022년 12월 개정)에 적합하도록 구체적 설치기준을 개선한다.

스마트도시 기술 적극 접목, 재해에 신속 대응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전례 없는 폭우 등 극한 기후현상은 지금까지의 재해대응 체계로 신속·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소방

· 재해 등 각 분야 CCTV 정보에 대한 통합 관제 시스템인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재해대응 전(全) 단계(재해예측-모니터링-상황전파-구호조치)를 효율화한다. 통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재해정보를 실시간 융합하여 취약지역 도출 등 분석기능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CCTV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한 재해 경보체계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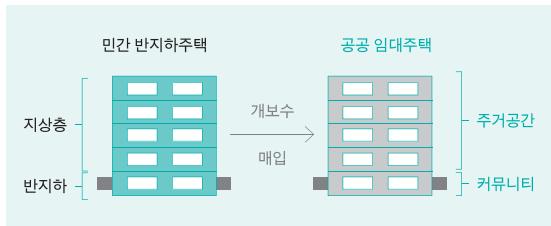
또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공모를 통해 그간 발굴한 다수의 기후위기 대응 솔루션의 체계적인 확산을 도모한다. 강소형 스마트시티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 등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을 집약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스마트시티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5월에 기후위기 대응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2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반지하 주택의 단계적 감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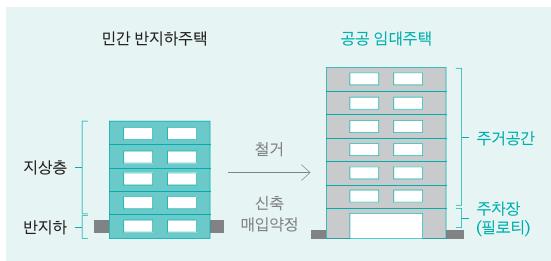
재해취약주택 해소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주택은 안전한 신축 주택으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기존 개별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이 매입한 후 안전한 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지하층을 커뮤니티 시설(공동창고 등)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한다. 반지하 밀집지역은 재개발이나 소규모 주택정비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을 확대하고,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를 비롯하여 소규모 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한편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거환경·안전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축 매입 후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출처: 국토교통부(2023)

대체 주거공간 마련 및 거주자 안전 확보

반지하주택 거주자는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반지하·쪽방 등 거주 구구에 대한 공공임대 등 정상거처 이주 지원을 대폭 확대(2022년 공공 0.7만 호→2023년 공공 1만 호+민간 0.5만 호)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상향(매입·전세임대 15%→30%)한다. 생활권 내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호당 5,000만 원)을 통해서 이주를 지원한다.

또한 침수피해·산불 등 재해 발생 시에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 보증금 면제, 임대료 50% 지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정상거처 이주 지원과 연계하여 무주택 및 소득·자산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현재 불가피하게 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자 안전을 확보한다. 반지하주택이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 가구는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 진단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속 권고·유도할 계획이다.

마치며

지난해와 같은 침수피해는 배수용량을 초과한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기후, 도시의 지형적 요소, 반지하주택 형태 등 다수의 원인이 중첩되어 비롯되었다. 따라서 배수시설 확충과 하천 정비 등 시설물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차원의 조화롭고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크

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재해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시설기준 강화, 스마트도시 기술의 접목, 취약주택의 해소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예정이다.

참고문헌

- 1 국토교통부. (2023).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 높인다. 2월 22일 보도자료.
- 2 아시아투데이. (2023). 과학적 침수 예측부터 재해약자 긴급대피 까지…서울시, 우기 침수피해 대비 응답. 5월 11일 기사.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511010005825>.
- 3 김준성, 이종소, 표희진, 구형수, 이상은. (2022).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국토이슈리포트 제67호.
- 4 국토교통부. (2022). 2021 도시계획현황.

더욱 안전한 보행을 위한 인천형 공공디자인 'Hospital zone'

임철희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장

도시침술, 인천형 공공디자인

1883년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개항한 인천시는 제물포항을 중심으로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며 국제도시로 변모하였다. 그 결과 1900년대 초, 인구 3만 명이 안 되는 작은 어촌이었던 인천시는 불과 100여 년 만에 인구가 100배 늘고 면적도 100배 이상 커진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2003년에는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송도·영종·청라가 지정되면서 제2의 개항기처럼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인천 시민의 85% 이상이 거주하는 원도심은 기반 시설 부족과 노후 건축물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도심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보행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민 만족도가 높은 공공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비단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도시침술, * 도시실험, 택티컬 어바니즘, 어반디자인랩 등의 이름으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2017년 국내 최초로 수립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통해 총 159개 항목의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비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공공디자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중 가로공간, 보행안전 시설물 및 시각매체 등 보행환경과 보행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와 아이디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의료시설 주변 보행안전안심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배경

풀리지 않는 숙제, 보행안전

2022년 12월 수립한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인천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길 원하는 도시디자인 분야는 가로·경관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타났다. ** 더

죽이 인천시의 치안지표나 안전지표는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시민안전 체감도는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2020년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종합계획'과 함께 광역지자체 최초로 방범시설 설치지원 조례를 만들고 범죄 취약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학생·노인 등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중 도로의 약자인 노인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2021년 우리나라 65세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601명(10만 명당 9.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2011~2020년 고령보행자 사망사고의 66%가 도로횡단사고로 나타났다.

지자체 차원의 보행안전 자구책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걷고 싶은 거리와 안전한 보행환경이 중요하다. 보행안전은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도시, 건축, 공원, 녹지 등 다양한 도시행정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개별적 시설물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지만 여러 요소가 어우러진 도시공간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빈번하다. 불법 유턴 및 역주행에 따른 보행로 침범 학생 사망사고, 시골길 횡단보도 노인 사망사고,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등 최근 들어 유난히 학생과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운전자 부주의와 교통법규 위반이나 급발진 등은 운전자 교육과 계도, 제조업체의

기술적 결합을 찾아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행공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행태 분석을 못 해서 벌어진 사고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인천 시민의 30%가 교통약자이며, 이 중 고령자와 어린이 비율이 장애인의 5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원도심의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원도심 보행안전우선구역- H존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7차 사업'****을着手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친화 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행약자가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선 보행약자들의 통행이 많은 의료시설 주변에 최상의 보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병원·요양원 등 환자 및 보행약자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무장애디자인 등을 적용하여 보행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찾기 쉬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사업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공공시설물(공간) 무장애디자인 개발, 시범 제작·설치 등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우선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병상 수, 유동인구,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병원·요양원·약국 등 환자를 비롯한 보행약자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안심구역(Hospital zone, 이하 H존)'을 설정하였다. 특히 병

* 브라질 쿠리치바의 시장이자 도시건축가인 자이미 레르네르(Jaime Lerner)가 쓴 도서. 침술이 신체 곳곳에 최소한의 자극을 주어 건강을 회복시키듯이 도시에도 최소한으로 개입해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도시설계를 뜻한다.

**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 설문조사 결과(2022): 인천 시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도시디자인 대상은? 가로·건축·경관 개선(23.6%), 범죄로부터의 보호(15.4%), 편리한 생활환경(14.7%)

*** 시민안전 체감도: 2019년(16위), 2020년(18위), 2021년(18위)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낙후된 원도심 고유의 정체성을 재해석한 지역별 스토리텔링으로 맞춤형 디자인 보급과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선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이다.

상수 300개 이상의 대형병원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 주변 반경 500m(최대 1km) 이내 일정구간(보행약자가 도보로 10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을 H존으로 지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일리노이 노약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경우 보도와 도로를 단차 없이 시공하여 도시의 연속성을 높이고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공간을 실현하는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설계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뉴욕의 사인 디자인은 차량과 운전자 위주의 사인에서 벗어나 보행약자를 배려하여 표준 사인보다 2배 이상 큰 거리명과 화살표를 제공하고 일몰 후 가로등과 연계된 LED 조명 사인 등으로 안전한 야간보행을 유도한다. 일본은 넓은 버스 승강장, 간격이 좁아 배수로 덮개 등 작지만 세밀한 공공시설물 설치로 보행자를 배려한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는 2009년부터 노인 및 사회적 약자들이 횡단보도 신호등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린 맨 플러스(The Green Man Plus)' 카드를 시행하고 있다.

H존은 보행약자를 위한 다양한 국내외 정책들을 모아 최고의 보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H존의 기본 방향은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안심 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안내 체계 구축이다. 인천시는 대상지 현황조사를 위해 시민디자인단과 함께 휠체어 사용자, 목발 사용자, 노인,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 유형 별 그룹을 4개로 나눠 역할 페르소나 체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또한 보행여건 분석 결과, 공공시설물의 개선 점은 ▲인지성을 강화한 안내사인 디자인 적용 ▲안전보행 유효폭 확보를 위한 가로시설물 재배치 ▲응급차량을 위한 주차공간 및 안내사인 조성 ▲안심보행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적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공공간 개선점으로는 ▲보행안전성 확

보를 위한 시설물 재배치 ▲주거·상업지역 불법주차 문제를 고려한 도로디자인 ▲보행 유효폭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공업지역 병원 내 녹지휴게 공간 조성 등이 있었다.

아울러 안전한 보행공간을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행친화공간(휴게공간 조성, 보도 평탄화), 웨이파인딩/시설물(인지성이 강화된 안내사인, 보행장애 시설물 재정비,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안전 교차로(횡단시간 연장, 횡단보도 보행친화시스템 정비), 차량 서행 유도(차량용 안전디자인, 용도지역 별 시케인 적용, 바닥유도사인 적용) 등이라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의료시설 주변 보행안전안심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콘셉트 및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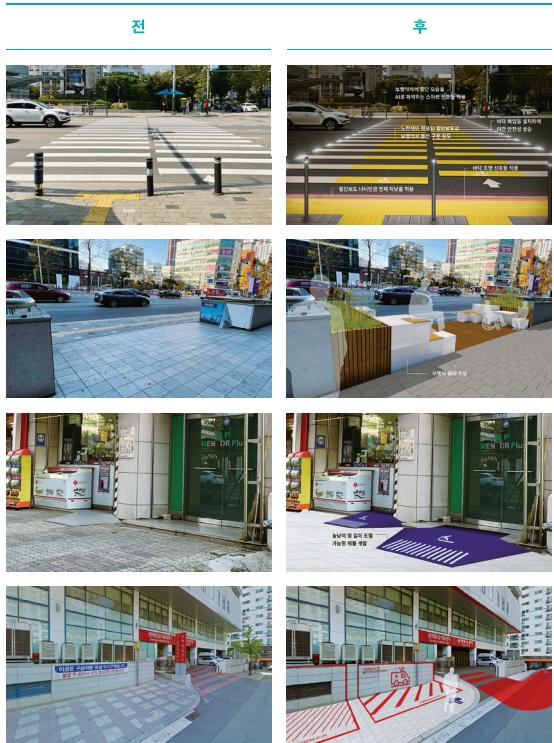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가이드라인 콘셉트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천천히 걸어도 편안한 보행환경
2. 편리한 스마트 인프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도시환경
3. 신속하고 찾기 편한 시설 안내

넓고 깨끗한 보행공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건물전면 공간, 보행안전공간, 조경·도로 시설물 공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유효폭(2m) 확보, 고정시설물(2.1m) 및 돌출간판(2.5m) 최소 높이 설정,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열선 설치와 미끄럼방지 재질 및 저채도 바닥재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보행로의 종단(1/24) 및 횡단(1/50) 기울기를 명시하고, 보도 폭이 2m 이상인 경우 보행안전존의 최소 유효폭 1.5m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보도 폭이 2m 이하인 보도가 연속될 때에는 50m 이내 결절(회전) 구간마다 교행 구역을 설치하여 휠체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평탄화된 보행로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건물전면공간은 보행편의공간을 조성하고, 조경과 식재 등이 건축물 진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보도와 진입부의 단차가 발생하는 건축물 진입부에는 가변형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인천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보행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보행자별 안전장치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류장 내 버스베이 제거, 지장물 이설, 녹지대 축소 등을 통하여 보행로를 확장하고 보도블록 대형화(30cm 이상) 및 노면 불량구간 보도 정비 등을 연말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또한 경찰청 교통심의를 통해 기존 횡단보도 패턴을 황색(내측)과 백색(외측)으로 변경하고, 스마트신호등을 설치하여 일반인보다 이동속도가 느린 보행약자 친화형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 밖에 차도와 보도가 만나는 지점의 단차를 없애는 무단차 설계 지침을



보행자 안전안심 디자인(안)

만들고 단기간 개선이 어려운 병·의원과 약국·요양원·상가 등으로 연결되는 주요 동선에는 가변형 경사로를 설치한다.

의료시설 주변 보행안전안심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30일 제2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현재 디자인 및 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연말까지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 일반환자, 방문자 등 대형병원 이용자별 서비스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인천시는 가천대길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유지 내 불량 보도블록 철거, 녹지화단 제작, 수목 제거 등 사회공헌사업을 함께하는 한편 병원 주변 활용성이 떨어지는 공간에 환자와 방문객 및 일반인을 위한 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추후 인천시는 도로과 등과 협의하여 보도 평탄화 및 보도 시설물 정비 작업을 연말까지 진행하며, 남동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국비사업으로 확보한 ‘스마트디자인밸리지 사업(34억 원)’과 연계하여 버스 쉘터, 가로수, 안내사인 등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1 이왕기. (2013). 원도심 활성화 정책 연구, 인천연구원.
- 2 인천광역시. (2014).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 3 인천광역시. (2020).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개발 3차.
- 4 인천광역시. (2020). 범죄예방도시디자인종합계획.
- 5 인천광역시. (2021). 인천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 기본계획 (2021~2025).
- 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 지자체 보행안전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 7 서울연구원. (2016). 걷는 도시 서울.
- 8 서울특별시. (2017). 서울시 유니버설 통합가이드라인 2017.

AIA, 2023 도서관 건축상 수상작 발표

<https://www.aia.org/press-releases/6618060-five-projects-receive-2023-aiala-library>
<https://msrdesign.com/case-study/louisville-free-public-library-northeast-regional-library/>
<https://msrdesign.com/case-study/missoula-public-library/>
<https://www.sundt.com/projects/university-of-arizona-student-success-district/>
<https://www.cbtarchitects.com/project/woburn-public-library>



Atherton Library



Northeast Regional Public Library

출처: AIA 홈페이지. <https://www.aia.org/press-releases/6618060-five-projects-receive-2023-aiala-library>
 (검색일: 2023.6.12.)

미국건축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가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와 함께 2023 도서관 건축상 수상작을 선정, 발표하였다. AIA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신축과 리모델링, 도서관으로 용도 전환, 인테리어 재설계 등에 따른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Atherton Library

Atherton Library는 지역에서 새로 조성한 공공시설 부지에 지어졌다. 도서관은 도서관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조된 타운홀 건물과 연결되어 있는데, 넓게 펼쳐진 입구의 파티오와 통창 그리고 식재 통로를 통해 연결성이 강조된다. 도서관 중앙에는 채광 좋은 독서 공간이 자리하고 있고 이는 메이커 스페이스, 커뮤니티 공간과 이어진다. 북쪽으로 어린이 섹션이 자리하고 남쪽으로 청소년과 성인 섹션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세대 간 관여와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실내외 메이커 스페이스와 디지털랩이 자리하고 있으며, 노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루이빌공립도서관의 Northeast Regional Public Library

이는 루이빌공립도서관이 지역 도서관 확충을 위해 진행한 10년 마스터플랜의 마지막 프로젝트이다. 지역의 녹지 공간에 방치되어 있던 작고 오래된 기존의 도서관을 대체하고, 커뮤니티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시설이자 도심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하였다. 도서관은 기존 건축의 규모를 존중하고, 녹지 공간의 수목을 보존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의 산책로와 잘 연결되도록 조성되었다. 기둥이 없는 실내공간, 다기능 액세스 플로어, 이동 가능한 가구 등을 통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건축으로 디자인되었다.

미줄라공립도서관의 New Main Library

이 도서관은 ‘커뮤니티 하우스’를 표방한다. 설계에 지역의 주요 커뮤니티 조직(Missoula Community Access Television, Families First Learning Lab, SpectrUM Discovery Area, University of Montana Living Lab)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커뮤니티 액세스 TV, 가족 중심 러닝랩, 몬태나주립대학교 봉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도서관을 채우고 있다. 미줄라(Missoula) 지역의 자연적 특성, 즉 산의 스카이라인을 비롯해 퇴적층이나 암벽과 계곡 등을 형상화한 디자인 요소가 건축을 이루고 있다. 풍경과 시간 변화를 그대로 비추는 외장재(클래딩)는 계곡 지형에 따라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지역의 날씨를 상징하듯이 도서관의 외관을 수시로 바꾸어 놓는다.

애리조나대학교의 Student Success District

애리조나대학교에서 다양한 학생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 프로젝트이다. 대학은 심리상담과 도서관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의 학업유지율과 졸업률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기존에 학생들의 활동 공간과 멀리 떨어져 있던 서비스를 중앙으로 집중·통합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4층 규모의 학생 서비스 공간을 신축하고, 유서 깊은 학교 건물인 베어다운체육관(Bear Down Gym)을 복원하여 광범위한 학생 서비스 프로그램 용도로 재정비하였다. 중앙도서관과 알버트 위버 과학공학도서관(Albert B. Weaver Science-Engineering Library)은 도서관 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일부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네 개의 건축은 캐노피·통로·다리를 통해 연결되고, 건축 사이에는 새로운 야외 공간이 설계되었다.

Woburn Public Library

Woburn Public Library가 1876년 문을 연 이래로 워번(Woburn)시의 인구는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시는 늘어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공립도서관에 새로운 건축을 증축하기로 결정하였다. 3만 500제곱피트의 신축 공간은 기존 건축의 패сад과 교차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외장재는 유리를 택하여 기존 건축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존 건축의 입구와 로비가 보존되어 유리 연결부를 통해 북동쪽 신축 공간과 이어진다. 직원들의 근무 위치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같은 수의 직원으로도 늘어난 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셀프 체크아웃 스테이션이나 자동도서분류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였다.

©Lara Swimmer



New Main Library

출처: AIA 홈페이지. <https://www.aia.org/press-releases/6618060-five-projects-receive-2023-aiaala-library>
(검색일: 2023.6.12.)

©Lara Swimmer



상 Student Success District
하 Woburn Public Library

©Robert Benson

몬트리올, 비어 있는 건축유산의 보존 및 개선 위한 프로젝트 추진

<https://montreal.ca/en/news/revitalizing-vacant-historical-buildings-call-centre-saint-paul-projects-45648>
<https://designmontreal.com/en/calls/impacte-program-centre-saint-paul?section=3802>

캐나다 몬트리올시는 비어 있는 건축유산의 보존 및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부동산 전략 이니셔티브 IMPACTE*의 일환으로, 첫 번째 프로젝트인 Centre Saint-Paul의 공개 제안 요청을 추진한다. 몬트리올 남서부에 위치한 Centre Saint-Paul은 몬트리올의 대표적 건축유산 중 하나로, 1912년 완공 이후 한때 시청과 소방서로 사용되었으며 1995년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거쳤으나 2015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공개 제안 요청은 1달러의 고정가격에 Centre Saint-Paul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정된 제안자는 지붕·창문 등 건축물 외부의 구성 요소를 보존해야 하며 천장 장식과 라디에이터 등 건축물 내부의 역사를 설명하는 주요 요소를 고려한 재개발이 요구된다. 그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지속가능성,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등 몬트리올시가 추진하는 '2020-2030 기후계획'을 지원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 공개 제안 요청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8월 초 제안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Mathieu Sparks



**IMPACTE의
첫 번째 프로젝트
Centre Saint-Paul**

출처: 몬트리올시
디자인국 홈페이지.
[\(검색일: 2023.6.9.\)](https://designmontreal.com/en/calls/impacte-program-centre-saint-paul?section=3802)



* Initiative Montréalaise en vue de la Protection, l'Amélioration et la Conversion des immeubles patrimoniaux excédentaires dans un contexte d'excellence en Transition Écologique의 약칭

에콰도르 도시개발주택부, 사회주택을 위한 공공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당선작 설명회 개최

<https://www.habitatyvivienda.gob.ec/boletin-107/>
<https://www.habitatyvivienda.gob.ec/boletin-075/>
<https://www.habitatyvivienda.gob.ec/boletin-068/>
<https://www.ramaestudioec.com/casa-cevallos/#1480396323764-5d478719-f201>

에콰도르 도시개발주택부(MIDUVI)는 지난 5월 24일, 암바토(Ambato)에서 국가예비사업공모인 '사회주택을 위한 공공건물 재활용 프로젝트'의 당선작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프로젝트는 에콰도르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국가 건물을 사회주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으로, 암바토에 위치한 도시개발주택부 소유의 40년 된 공공건물을 재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에콰도르 건축가협회(CAE), 프랑스 개발기구(AFD), 미주 개발은행(BID)이 후원하는 설계 공모전을 진행하였으며, 총 170팀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월 당선작으로 RAMA Estudio의 'Casa Cevallos'를 선정하였다.

이날 당선작 설명회에서는 RAMA Estudio측이 Casa Cevallos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건축적 특성을 전하였다. 노인과 청소년·임산부·장애인 등 각 사용자 특성에 맞춘 7개의 유형을 제안하며, 45명의 주민을 위한 16개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다.

Cevallos 공원과 마주한 건물은 1층 공공공간의 확장 및 통합을 통해 보행자의 접근 용이성을 갖추며, 외관에 나무와 금속·유리 등을 활용한 갤러리 형태를 고안하여 거주공간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통합된 디자인을 제시한다. 3개의 구역으로 나뉜 아파트는 각각의 정원을 통해 연결되며, 각 구역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광장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 ▲반려동물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이어주는 정원은 커뮤니티를 위한 회의 공간과 카페,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CONCURSO NACIONAL DE ANTEPROYECTOS
RECICLAJE DE EDIFICIOS PÚBLICOS PARA VIVIENDA SOCIAL

Buscamos propuestas innovadoras y en consonancia con el derecho a la ciudad y a la vivienda adecuada

Ministerio de Desarrollo Urbano y Vivienda

Gobierno del Encuentro
GUILLERMO LASSO PRESIDENTE



©RAMA Estudio

'사회주택을 위한 공공건물 재활용 프로젝트'의 설계 공모전 포스터
출처: 에콰도르 도시개발주택부 홈페이지. <https://www.habitatyvivienda.gob.ec/boletin-075/>(검색일: 2023.6.8.)

당선작 Casa Cevallos
출처: RAMA Estudio 홈페이지. <https://www.ramaestudioec.com/casa-cevallos/>(검색일: 2023.6.8.)

행정안전부, 마을·시장·골목 활력 찾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
2023.4.30.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200억 원 규모의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하였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관광객 등 지역 방문객 확대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기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은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지역특성 활용 로컬 디자인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등 5개 과제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3분기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이 로컬 유학생활 기반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워케이션 등 지역의 체류형 인구 늘리기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고향올래(GO鄉 ALL來) 사업'과 상호 보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①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지역 대표자원 활용 경관개선 등 정비 통한 유동인구 유입
② 지역특성 활용 로컬 디자인	지역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미관개선으로 지역상권 및 관광 활성화
③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④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실내놀이터 등 편의시설 조성 통해 낙후된 이미지 및 접근성 개선
⑤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고밀도·저밀도 지역 구분으로 상권 특성화 및 상권의 공동체 기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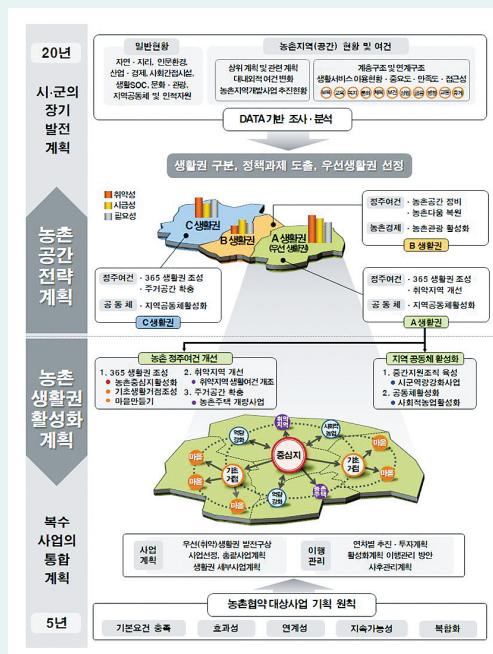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살고 싶은 농촌 위해 지자체와 '농촌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023.4.26.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하여 총 53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난개발과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공간에 대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올해부터 5년간 평균 268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여 농촌 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리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산업(영주, 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이 외에도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협약에 포함하여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한편 농촌협약의 근거가 되는 「농촌공간계획법」이 2024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의 일정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시·군의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업 확대

경상북도 활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원
2023.5.23.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2023.4.18.

경상북도, 어촌 활성화 거점으로 '이웃어촌지원센터' 개소

경상북도 어업기술원은 5월 23일 포항 구룡포에 이웃어촌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이웃어촌지원센터는 귀어학교와 귀어귀촌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귀어인과 귀어희망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청년어업인 및 해녀 육성 ▲어촌 6차산업화 창업교육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어업 등 어업인단체 육성 ▲어촌에서 살아보기 등을 지원한다. 약 9,917m²의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센터는 교육장, 요리·가공 실습실,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북도는 이웃어촌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귀어인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돋고,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어업인과 경북 해녀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촌 6차산업화 창업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단순히 고기를 잡는 마을에서 벗어나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활력 넘치는 어촌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

경상남도, '2023년 체류형 어촌체험기반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경상남도는 2023년 체류형 어촌체험기반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저도어촌계(사천시)를 선정하여 1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은 어촌마을의 노후화된 빙집과 체험관·폐교 등을 리모델링하여 가족 단위 체험객이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형 숙박시설을 마련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에 3년간 개소당 10억 원씩 모두 5개소에 50억 원을 지원하며, 올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2개소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법인 또는 어촌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진행하였고, 총 4개 어촌계에서 사업을 신청하였다. 이후 사업 선정을 위해 건축·리모델링과 관광·경영·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체류형 숙박시설 활성화 및 성공 가능성 ▲사업비 투자 및 리모델링 계획의 적정성 ▲프로그램 관리·운영 ▲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천시 저도어촌계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향후 저도어촌계는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다양한 어촌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 전 과정에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사천시 저도어촌계

출처: 경상남도. (2023). 경남도, 체류형 어촌체험기반 조성으로 어촌 활력 증대. 4월 18일 보도자료.

‘로컬+청년’ 정책 추진하는 지자체들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2023.5.8.

인천시 인구가족과
2023.5.24.

전라남도, 지역자원·특산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전라남도가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창업 단기 집중교육 과정을 5월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타 시·도 및 전남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100팀 130명을 선정하였다. 이번 교육 과정에는 선정 팀 중 일부가 우선 참여하였으며, 현직 스타트업 CEO의 창업 관련 기초 지식 강연과 비즈니스 모델 설계·구체화 실무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자금조달 전략 분석, 리더십,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1 대 1 멘토 강의도 진행되었다.

한편 선정 팀은 교육 수강에 앞서 2개월 동안 전남 지역의 지역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지역자원 조사 활동을 벌였다. 도는 1차로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우수 팀에 재료비, 인테리어비, 사무실 임차비 등 사업화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 사업화 과정을 검토해 성공 가능성이 큰 25개 팀에는 사업 고도화 자금을 최대 5,000만 원 지원하고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과 멘토링 등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지역자원 활용 창업하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인천광역시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인 강화군·옹진군·동구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36개 팀을 선발하였다.

인천시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아이로컬(I^Local)’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강화군·옹진군·동구 지역에서 각 12개 팀씩 총 36개 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36개 팀은 팀별로 최대 5,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5월 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지역활동가와 연계한 지역 자원조사, 네트워킹, 선진지 탐방 등에 있어 시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창업에 필수적인 지역 자원조사를 3개월간 팀별 1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창업 아이디어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사업의 타당성을 가늠하고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교육 수료생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재무·회계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기업으로 등록되어 센터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를 받거나 우수기업 추천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의 집중호우, 침수 위험 대비에 박차

부산시 기획담당관, 자연재난과
2023.4.13.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건축문화팀
2023.5.1.

인천시 건축과
2023.5.23.

부산시, '도시침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부산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침수 통합관리시스템'의 대시민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시는 4월 열린 제8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구축 중인 도시침수 통합관리시스템을 시연하였다.

부산시의 도시침수 통합관리시스템은 도시침수 예상도를 기반으로 침수 위험 정보, 최적 대피경로와 도로 통제 상황, 과거 침수이력 등 재해지도, 현장 CCTV, 계측자료 외 도시 침수와 관련된 정보 일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침수위험정보를 확인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사용자 기반의 도시침수종합정보 ▲하천수위·조위·강우정보 등 실시간 기상관측정보 ▲재해정보지도 및 자연재난행동요령 등이 있다. 특히 대피가 필요한 경우 도로 상황, 교통 통제 상황, 대피소 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침수 지역을 회피하는 최적의 대피경로도 제공한다.

시는 앞으로 관측장비 확충,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연계 확대 등을 통한 데이트 축적과 품질 보완을 통해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충청남도, 침수 취약 주택에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충청남도는 관내 시·군과 함께 침수 우려 가구 및 단지에 방지 시설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도내 반지하주택 344가구와 공동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가구 105가구, 지하수위를 고려한 하천변 인근 단지 34단지를 우선 설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월부터는 세부 실태 조사와 실측조사를 병행해 침수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우선 설치 대상 가구·단지에 시설 설치를 완료한 뒤 지속 관리 대상 100여 가구를 추가 선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인천시, 반지하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무상 설치

인천시가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반지하주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 3월 시에서 발표한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세입자 이주 지원과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이어 반지하주택 거주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폐식 방범창은 반지하주택 침수 시 수압으로 인해 현관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창문으로 탈출하게 하여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시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625가구에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반지하주택에 전입신고한 시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와 노인·아동·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 곳곳 안전 사각지대에 대응 시책 추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기술감사팀
2023.4.24.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
2023.5.4.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부실 놀이기구

출처: 경기도. (2023). 경기도 내 민간 캠핑장·키즈펜션 놀이기구 대부분 무등록. 어린이 안전사각지대, 4월 24일 보도자료.

경기도, 민간 캠핑장 등 무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실태 점검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약 1개월간 도내 31개 시·군 어린이놀이시설 1만 8,268곳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내 민간 캠핑장과 키즈펜션 중 상당수가 안전 인증이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캠핑장 운영 시 안전 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정기 시설검사를 비롯하여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과 상해보험 가입 등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민간 캠핑장 739곳 중 어린이 놀이기구를 동록한 곳은 단 9곳뿐이었으며, 표본 현장점검을 벌인 민간 캠핑장 20곳 중 17곳이 별도의 법적 검토 없이 부대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가평군과 안산시 대부분을 중심으로 성업 중인 키즈펜션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 인증이나 정기 시설검사 등의 무가 없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도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부실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와 해당 시설 철거 등의 조치를 시·군에 통보하고, 시설의 관리·감독·점검 부실에 대한 주의를 내렸다. 또한 도는 행정안전부에 키즈펜션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다며 밝혔다.

서울시, 스타디카페 화재안전대책 추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스타디카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스타디카페는 자유업종으로, 영업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영업형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스타디카페에 대한 표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스타디카페와 입점해 있는 건물의 화재 발생 이력 ▲소방시설 설치현황 ▲입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심야시간 무인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영업주에게 영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시설·용품에 대한 정기 점검과 화재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화재안전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컨설팅을 통해 학원밀집 지역의 무인 운영 스타디카페를 선정하여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및 피난통로 등 비상구 확보를 지도하고, 가맹점 대표자와 영업주에게 영업장의 출입문은 화재 및 정전 시에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건축과 도시공간

—

Vol.50

Summer 2023

장소 탐방

Place Review

3

충남내포혁신플랫폼은 ‘보이되 보이지 않는 건축’을 표방한다. 미세하게 다른 디테일을 가진 세 개의 매스는 연결되고 확장하며 그 자체로 혁신과 미래 지향성을 드러낸다. 동시에 투명한 유리로 이뤄진 건축은 주변의 공원, 산책로, 자연경관 속에 녹아들어 자연스레 지역의 일부가 된다.

스스로 배경이 된 건축도 있다. 남산동 주민공동시설은 단순한 재료와 형태로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는 공간(空間)이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질감, 적극적인 차경(借景),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디자인 요소, 나아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채롭게 채워지고 있다.

충남내포혁실플랫폼의 주 출입구와 남서측 전경



남산동 주민공동시설 본관동 진출입구



보이지 않는 건축
- 충남내포혁신플랫폼
072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배경으로서의 건축
- 남산동 주민공동시설
088

보이지 않는 건축 - 충남내포혁신플랫폼 | 기존의 전형적인 업무공간
을 탈피하고 새로운 형식의 창의적인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
들과 소통하고 함께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이 가능
한 공간적인 토대(platform)를 만들고자 하였다.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배경으로서의 건축 – 남산동 주민공동시설 |
콘크리트라는 단순한 재료로 마을의 배경이 되고자 하였다. 콘크리트
표면의 다양한 가공은 해의 고도와 계절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보여준
다. 인접한 오래된 박공지붕의 창고는 계획된 담장을 치맛단 삼은 신·
구가 그리 어색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건축

충남내포 혁신 플랫폼

박종훈

전 (주)비컨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 대표

현 (주)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디자인부문 부문장

개요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89번지
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5,886m ²
건축면적	1,109.46m ²
연면적	2,939.87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15.70m
건폐율	18.85%
용적률	45.16%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설계	김경민(제너럴 구조기술사사무소)
설계	박종훈
설계담당	박원동, 이바다, 윤성민, 박희영, 나지훈, 황지민
시공	이홍기(알엠에스 테크놀러지)
기계·전기설계	조권호(디이테크)
설계기간	2018. 7.~2019. 6.
시공기간	2019. 12.~2021. 5.
공사비	약 90억 원
건축주	충청남도



투명한 보이드 공간은
중심에서 외부로 다층적인 겹공간 구조를 가지게 되며
반복적으로 겹치는 공간들을 통하여
주변의 자연경관과 내부의 풍경을 서로 다채롭게 인지하게 한다.

실내공간이 드러나는 남측 전경

세밀한 공간적 결합을 통하여
개별 단위의 업무조직과 사무실이 단순하게 집한된 것이 아니라
혁신과 융합을 위한 공동의 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공업무시설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 출입구와 남서측 전경





흥에공원으로 열린 1층 오픈 라운지와 카페공간



상 1층 오픈 라운지와 2층 오피스 라운지
하 3층 오피스 라운지



공유공간과 연계하며 공간을 확장시키는 아트리움



◎ 상단경관



◎ 상단경관



◎ 상단경관

상 3층 옥상정원
하·좌 공원을 향해 돌출된 매스
하·우 1층 외부 사이공간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공공건축은
내세워 보이기 좋은 큰 모뉴먼트가 아니라
지역의 삶과 사회의 일부로 융화되어 배경이 되는 것이다.

◎전경설



흥에공원을 마주한 북서측 전경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충청도에서는 내포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서해 바다를 끈 이곳의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홍성과 예산 지역의 너른 땅에 도청소재지인 내포 신도시를 품게 하였고, 두 지역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 지은 홍예공원이 이 새로운 도시의 중심이 된다.

이 프로젝트는 홍예공원의 가장자리 한편에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담당할 민·관 협치의 실험적인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리빙랩(Living Lab)과 혁신기관들, 사회적기업, 청년단체 등이 한데 모여 일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 첫째 목표였다. 기왕이면 기존의 전형적인 업무공간을 탈피하고 새로운 형식의 창의적인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공간적인 토대(platform)를 만들고자 하였다.

배치 계획

대지는 공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 도로를 남측으로 두고 북측의 자미원 호수 방향으로 낮아지는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다. 공원의 진입부와 산책로를 가까이 두고 대지 주변으로 적당히 키가 큰 소나무 군락이 공원 내 산책로 주변으로 보기 좋게 들어선 곳이다. 대지의 서측 편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용봉산 자락의 산세가 인상적이고, 그로부터 흘러나온 기운이 자연스럽게 호수를 건너 도서관과 도청으로 이어진다. 건물의 계획은 이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덩어리를 세 개로 나누고, 그 사이사이를 비워 중정과 아트리움을 배치하였다. 투명한 보이드 공간은 중심에서 외부로 다층적인 겹공간 구조(multi layered space)를 가지게 되며, 반복적으로 겹친 공간들을 통하여 주변의 자연경관과 내부의 풍경을 서로 다채롭게 인지하게 한다.

◎
[설계]



상 실내공간이 드러나는 남측 전경
하 주 출입구와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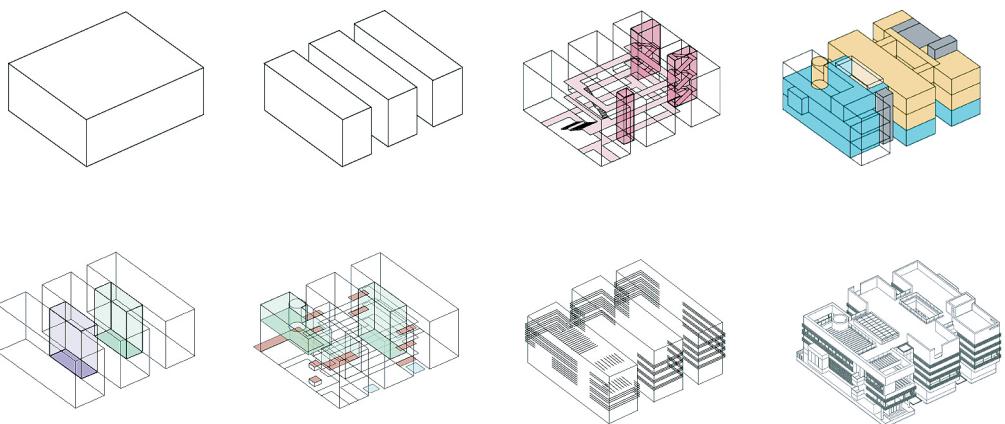


©박종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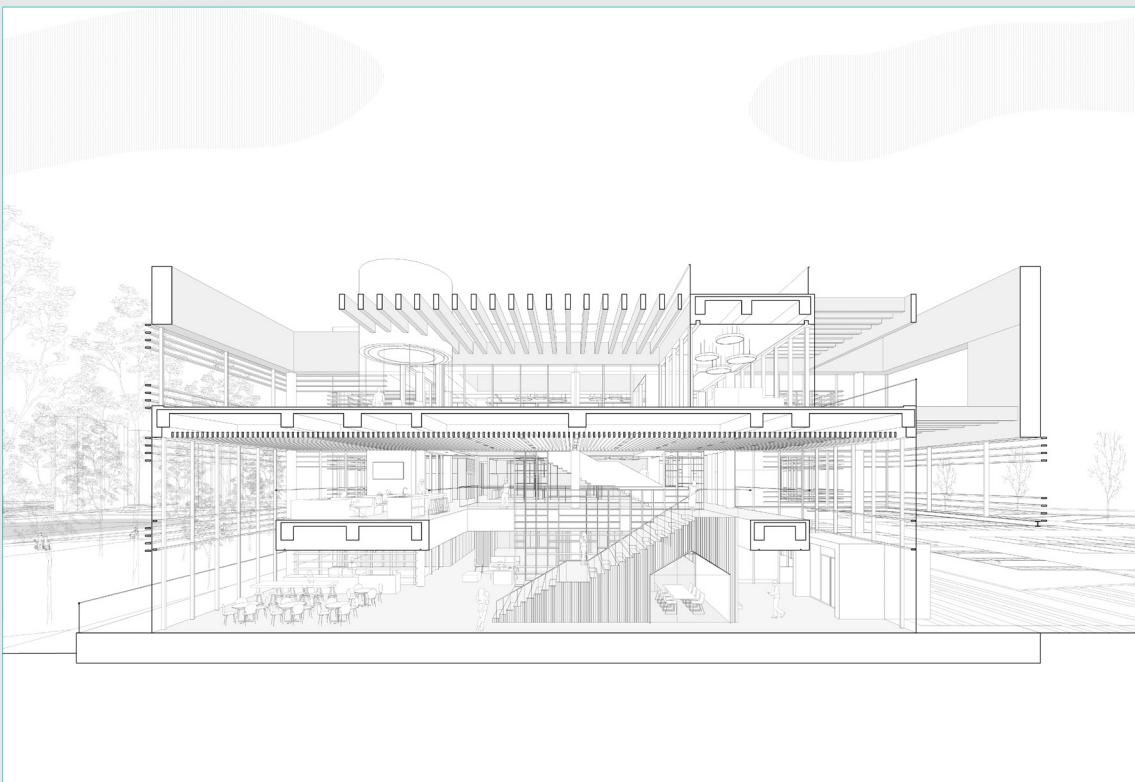
사이트 배치도



배치도



배치 다이어그램



단면 투시도



상 1층 오픈 라운지와 카페공간
중 1층 오픈 라운지와 2층 오피스 라운지
하 3층 오피스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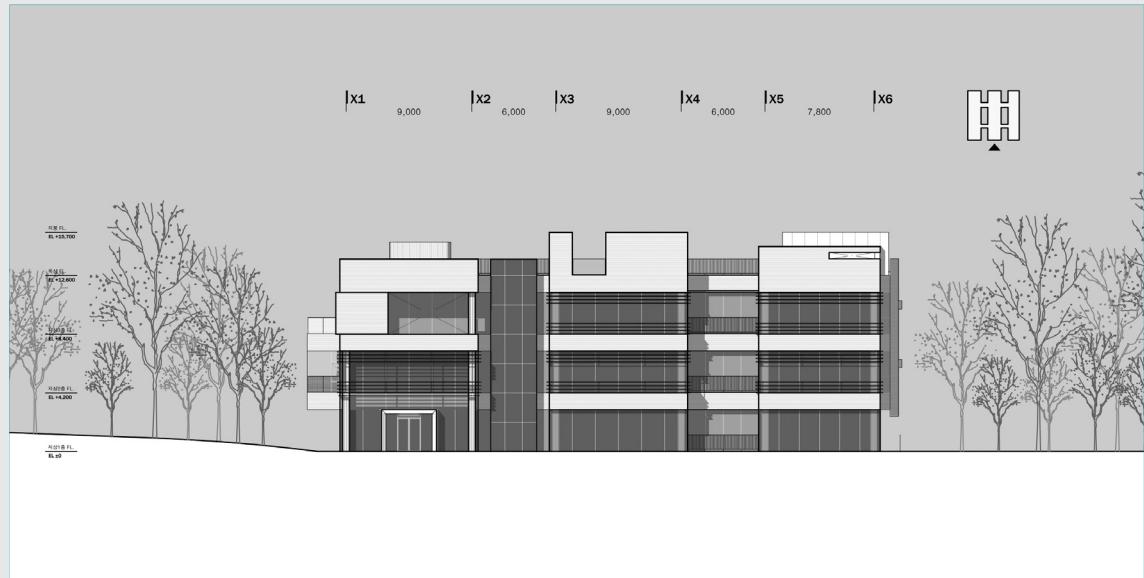
프로그램

이 건물의 1층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포용적인 공간으로 카페, 다목적실, 교육실 등을 배치하여 누구나 이 공간들을 대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층과 3층은 각 입주 기관들의 열린 사무공간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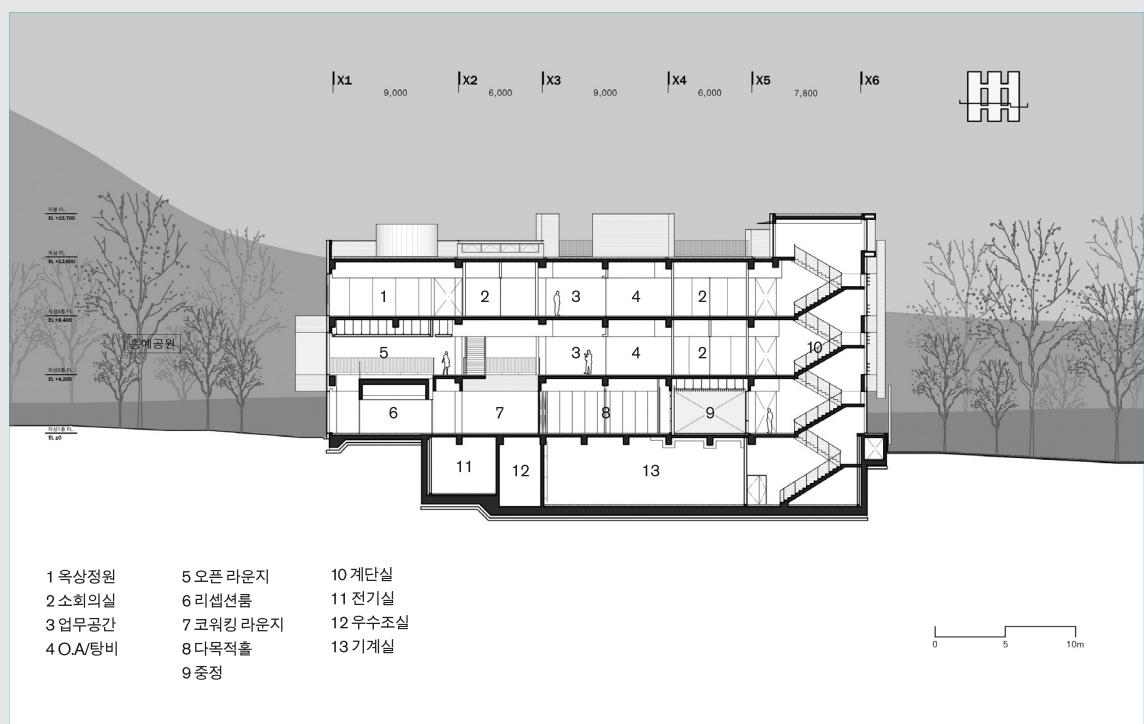
건물의 입주 기관들은 제각기 다른 규모의 인원 구성(2~12인)을 가질 뿐 아니라 인원의 변동이 갖고 업무형식 또한 다양하다. 이에 우리는 규격화된 업무공간의 최소 단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시선이 통하는 투명한 파티션으로 흐릿한 경계(Blurred Boundary)를 만들고 개별적인 업무공간 앞으로 자유롭게 공유가 가능한 회의 및 미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확장과 협업에 필요한 다양한 사무 형태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집중 업무공간과 공유 업무공간, 공공 공유공간(교육·세미나·포럼·지원 공간)의 세밀한 공간적 결합을 통하여 개별 단위의 업무조직과 사무실이 단순하게 집합된 것이 아니라 혁신과 융합을 위한 공동의 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공업무시설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건축적 산책로, 복도와 계단

홍예공원의 진입 산책로와 연결된 주출입 동선은 1층의 커뮤니티 라운지로 곧장 연결되며 오픈 라운지와 아트리움을 통해 건물 전체로 확장된다. 각 층의 연결 동선부는 평면의 중심에 ‘ㅁ’자의 형태로 아트리움과 중정을 뛰고 순환되는 구조로, 때때로 공용공간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실용적인 유틸리티 공간(O.A/CANTEEN)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내부로 연결된 이 산책로(Promenade)는内外부의 다양한 공간과 자연환경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단순한 동선 연결의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작동한다.



일면도



단면도



① 아트리움



상 공유공간과 연계하며
공간을 확장시키는 아트리움
하 1층 외부 사이공간

아트리움, 중정

건물의 중심부에 전체 충을 아우르는 아트리움과 이를 연결하는 계단을 만들고 개방된 복도와 공용업무공간, 라운지, 회의실 등이 이 주변을 감싸도록 하여 건물 전체의 중심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중정은 빛과 바람을 받아들이고 업무공간 및 화장실이나 문서 창고, 계단 등의 서비스 영역에 이르는 통로 영역까지도 자연채광을 확보하여 건물 내의 모든 곳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매스, 투명성, 재료마감

건물의 정면과 배면은 매스의 분절된 사이공간을 통해 주변의 경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였고, 좌우의 입면은 반대로 외부로 돌출시킨 라운지 공간이나 발코니 등의 건축요소를 통해 비례감과 긴장감을 갖도록 조정하였다. 3층의 옥상정원은 보와 가벽 알루미늄 루버로 둘러싸여 보이지 않는 투명한 볼륨으로 건물의 형태를 구성하며, 풍경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별도의 외부 휴게 공간을 제공한다. 건물의 내부는 외부와 같은 자연소재의 재료를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특히 천장은 부분적으로 별도의 마감 없이 설비와 구조를 노출하고 투명한 파티션들과 더불어 내부 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여 전반적으로 밝고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를 감싸는 로이복충유리는 그 특유의 반사 및 투과 효과를 통해 낮에는 건물의 볼륨으로 인지되며 주변의 녹음을 경계 없이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밤이 되면 이윽고 인공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고 서서히 존재가 사라지며 내부 공간을 밖으로 환하게 드러내어 어두워진 공원의 산책로를 비춘다.

보이지 않는 건축

우리는 이 건축의 존재감이 너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다. 정면인 도로변에서는 명확하게 인지되어야 하겠지만 배면이자 또 다른 정면인 공원의 산책길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투명하게 조금 덜 드러나기를 희망하였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공공건축은 내세워 보이기 좋은 큰 모뉴먼트가 아니라 지역의 삶과 사회의 일부로 융화되어 배경이 되는 것이다. 건축이 아닌 공동체의 삶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보이되 보이지 않는 건축’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사람이 만드는 건축

이 프로젝트를 다시 떠올려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사람이다. 우리의 제안을 순수하게 좋아해 주시고 지역의 좋은 본보기를 만드는 역할로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신 도지사님부터,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부터 열의를 다하고 고민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이 계셨던 덕에 우리도 그 대열에 끼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즐거운 여정이 되었다. 시공 초기에 유난히 신경전을 벌였던 현장 소장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가 쌓였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웃으며 끝나게 된 행복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준공 이후에 비어 있던 자리에 들어오게 된 장애인 단체의 카페테리아 협의까지 기분 좋게 마치고, 마침내 초기에 그려놓은 내부 풍경과 거의 동일하게 현장이 완성된 것은 모두가 함께한 사람들 덕분이다. 공공건축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 그들이 희망이다.

◎
[인문]



상 3층 옥상정원
중 공원을 향해 돌출된 매스
하 홍예공원을 마주한 북서측 전경

배경으로서의 건축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남산동 주민공동시설

조경빈

필동2가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대표

개요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진로 376-3(남산동)
용도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대지면적	428.16m ²
건축면적	142.20m ²
연면적	227.00m ²
규모	지상 2층
건폐율	33.21%
용적률	53.02%
외장마감재	노출콘크리트(살수치핑, 문양거푸집)
내부마감재	콘크리트 면처리, 외단열시스템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설계	제이더블유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설계담당	조경빈
디자인팀	지성배, 하규석, 이아름, 김민규, 장예림
시공	서우건축 주식회사
기계·전기설계	주식회사 원이엔씨
완공연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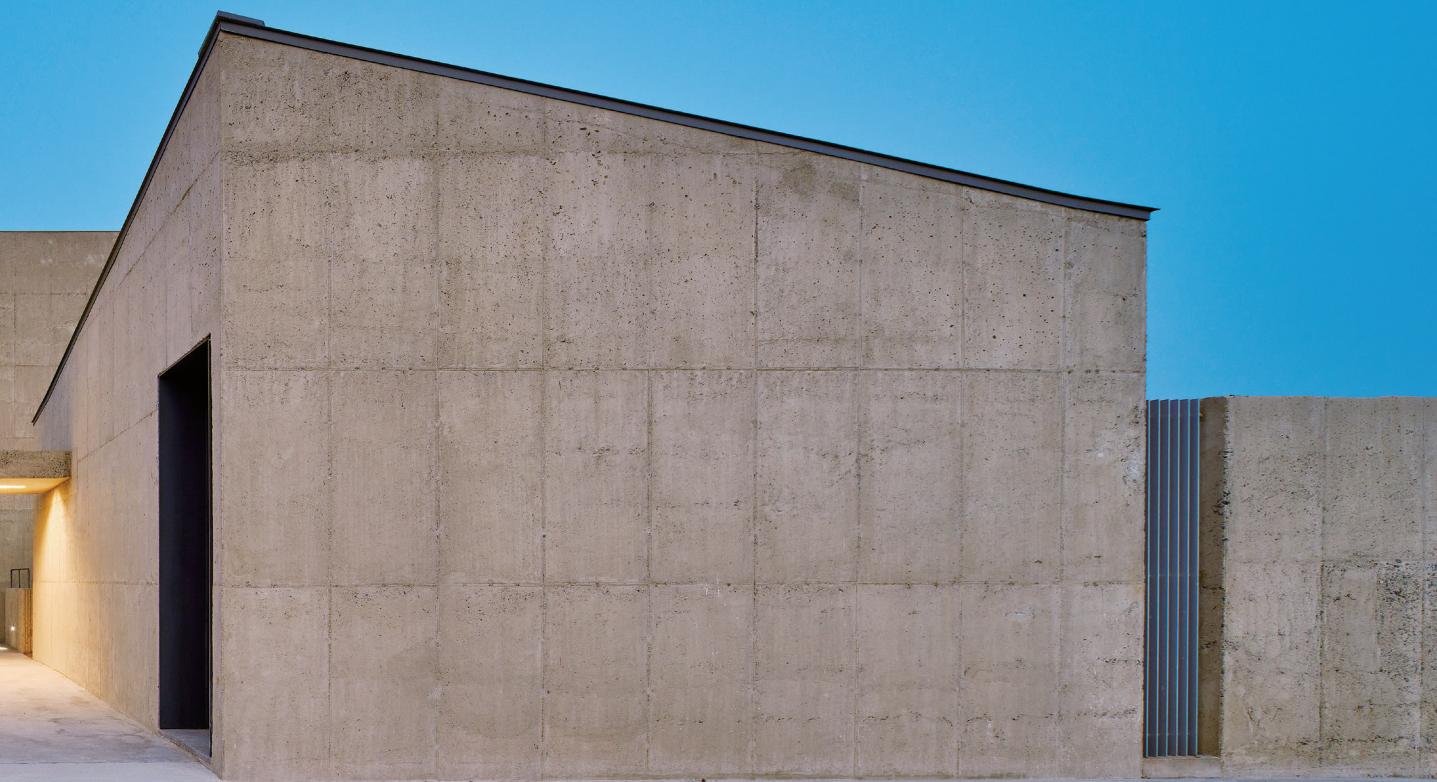


도로변에 접한 알마당

집들은 풍화되고 가로수는 그 세월을 기억하는 듯
높게 솟아 자연스럽게 어울려 마을의 배경이 되었다.
주변의 개발과 다르게 마을은 느리게 변화하였고,
어찌면 우리는 그 모습을 지키고 싶었는지 모른다.
건축으로 채우기보다는 최소한의 건축이 필요하였으며,
이는 외부 공간의 구획으로 주변 자연을 마당으로 끌어들이는 이유가 되었다.



본관동 진출입구





본관 뒷마당



© 한진



© 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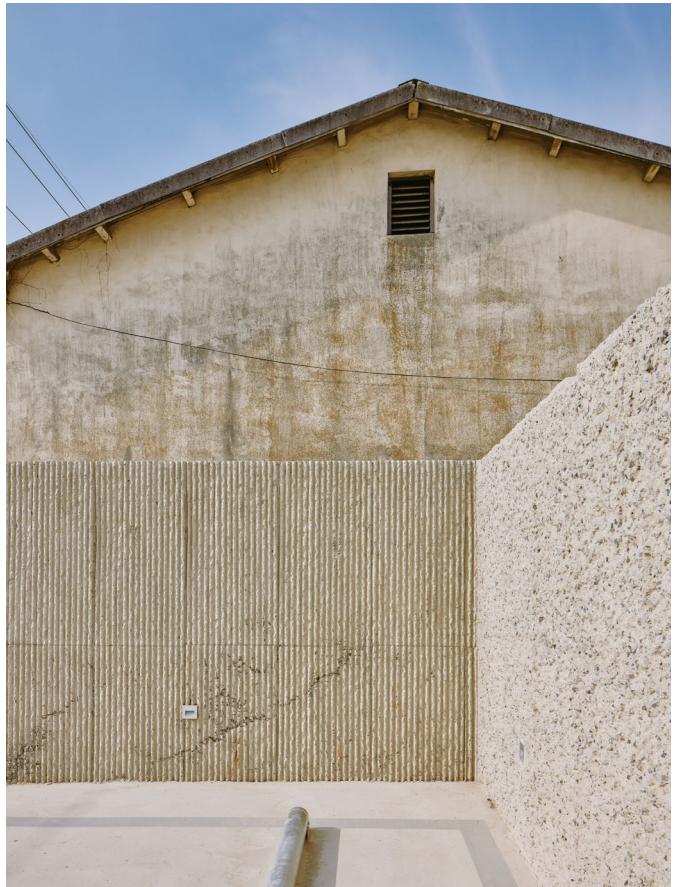


© 한진

상 1층 주민공동시설
하 2층 주민공동시설



상하 전통 담장을 재해석한 콘크리트 캐노피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실



상 단순성과 다양함이 공존하는 건축
하 담장과 박공지붕의 참고

정체된 시골 마을에서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름다운 건축물만이 아니라
사용자와 이용자 간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건축물은 그간에 배경이 된다.

©노경



마을의 배경으로 어우러진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

프로젝트의 시작점

남산동 주민공동시설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장이 정체된 지방 시골 마을에 새로운 개발 사업이 시작되어 고압 선이 지나는 마을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각각의 마을들은 그 보상금으로 개별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어떤 마을은 가구별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고, 또 어떤 마을은 창고시설을 신축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주민공동시설을 짓게 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하였다. 결론은 마을의 노인당 자리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짓되, 보상금으로 추진하는 계획이었기에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익이 다시 마을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들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기로 하였다.

우리는 남산동 주민공동시설이 기존 노인당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 사업의 취지에 맞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과 함께, 건축물로 인해 외부의 사람이 마을로 유입되는 과제를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행히 마을의 한 협동조합이 인근에서 카페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새로 신축될 남산동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하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마을에서 재배한 밀·보리·매실 등으로 만든 빵·과실청·가공제품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하고 있었고, 주민들에게 공간과 음식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정체된 시골 마을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름다운 건축물만이 아니라, 사용자와 이용자 간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건축물은 그간에 배경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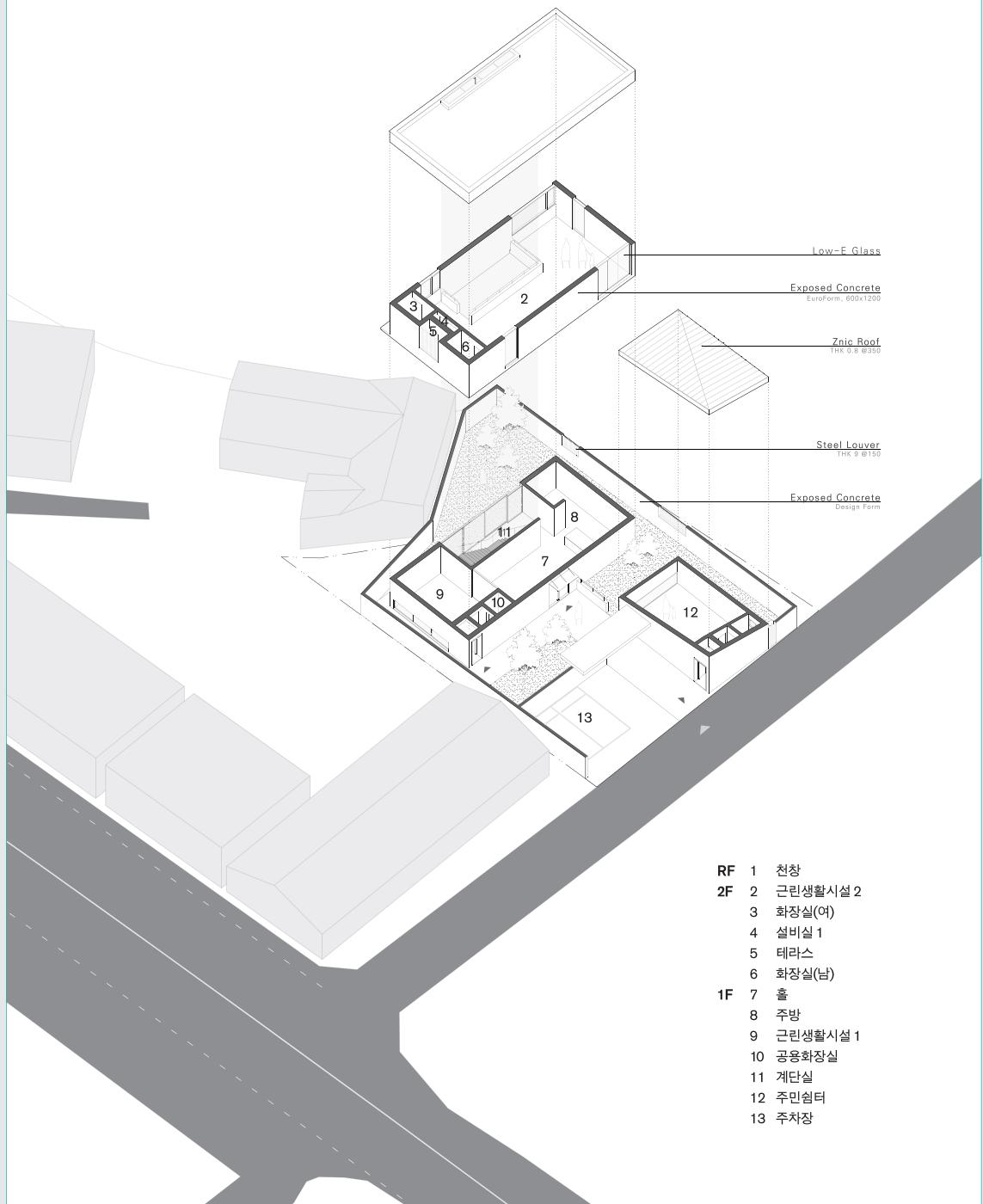
경계에서의 건축과 비움

남산동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 동네는 평림천이 평야지대를 적시며 황룡강과 합류하는 작은 마을이다. 집들은 풍화되고 가로수는 그 세월을 기억하는 듯 높게 솟아 자연스럽게 어울려 마을의 배경이 되었다. 주변의 개발과 다르게 마을은 느리게 변화하였고, 어쩌면 우리는 그 모습을 지키고 싶었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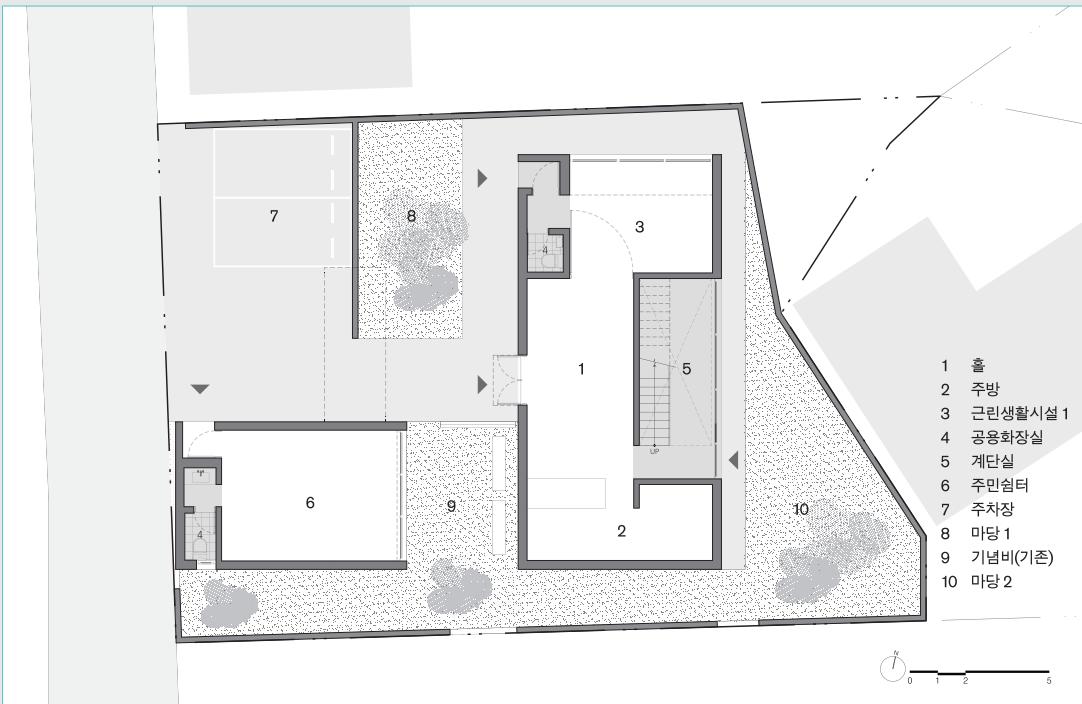
◎
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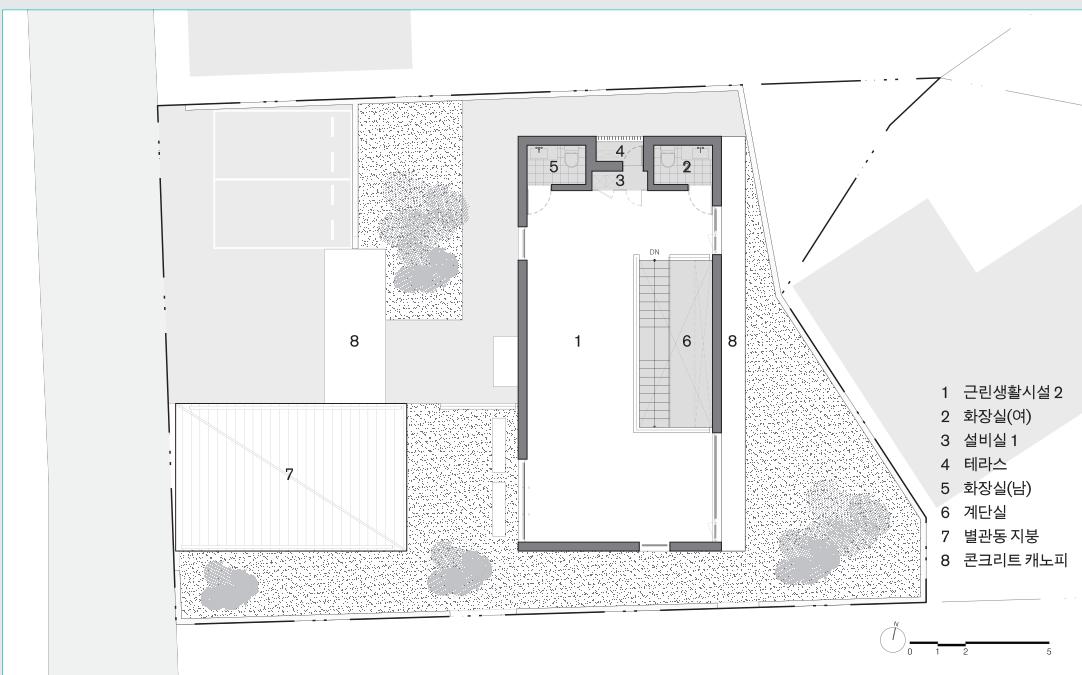
상 도로변에 접한 앞마당
하 본관동 진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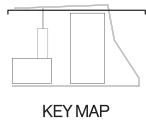
분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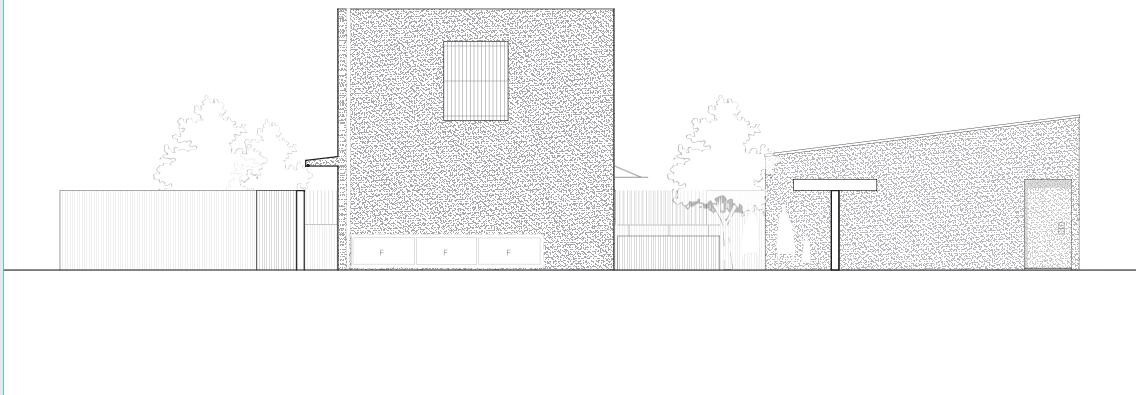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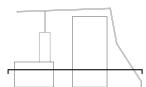
KEY MAP

0 1 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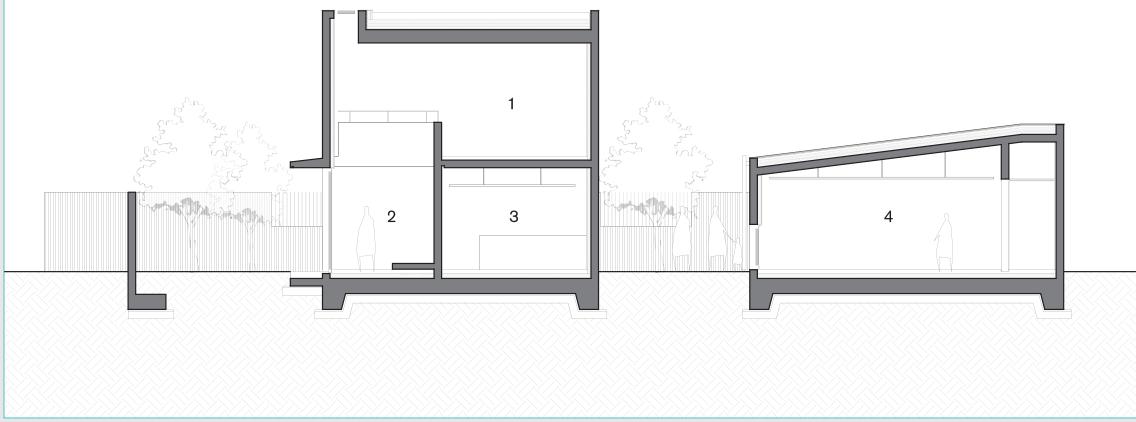
좌측면도

0 1 2 5



KEY MAP

- 1 균린생활시설 2
- 2 계단실
- 3 주방
- 4 주민쉼터



단면도

집터 주변은 너른 평야가 사철의 계절을 물들이고 자연을 그대로 받아줄 건축은 단순할 필요가 있었다. 건축으로 채우기보다는 최소한의 건축이 필요하였으며, 이는 외부 공간의 구획으로 주변 자연을 마당으로 끌어들이는 이유가 되었다.

시골 마을과 새로운 것: 다양한 질감

콘크리트라는 단순한 재료로 마을의 배경이 되고자 하였다. 콘크리트 표면의 다양한 가공은 해의 고도와 계절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보여준다. 인접한 오래된 박공지붕의 창고는 계획된 담장을 치맛단 삼은 신·구가 그리 어색하지 않다. 외부 시선이 차단될 높이의 치평 담장 안마당은 공간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주었으며 전통건축의 살림집처럼 따스하다. 아울러 본동 뒤편 후정의 수선한 오래된 담장 뒤 낮은 처마선과 문양거푸집의 담장이 공간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우리는 건축물의 다양한 재료가 오래된 마을을 혼탁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건축 구축을 위한 재료는 단순화되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필동2가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모형사진

상 1층 주민공동시설
중 2층 주민공동시설
하 담장과 박공지붕의 창고

구획: 마을, 담장, 마당

남산동 주민공동시설은 마을의 노인당이 있던 자리에 주민을 위한 시설로 건축되었으며, 주민을 위한 시설과 정체된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건축은 구획된 담장과 건축물 간 배치로 다양한 외부 공간의 형성이 가능하였다.

도로변에 접한 부속동과 본동은 주변의 평야에 유연하며, 담장 위 얹힌 콘크리트 캐노피는 진출입구의 경계임을 알려준다. 우리는 도심지 건축의 경계만을 표시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한 담장이 희귀하여 건축물을 감싸며 외부와 선을 긋는 한국 전통건축의 담장을 다시 구현해 보고자 하였다.

경계: 주민공동시설과 수익 공간

우리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수익이 가능한 공간의 경계를 경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획은 하되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고려하였고, 공간을 확장해 실내외로 규정 짓기보다는 건축물의内外 경계를 허무는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물은 본동과 부속동 사이에 구획된 담장에 의해 3개의 다양한 마당이 계획되었고, 그 마당과 연계된 실내 공간은 그 경계를 흐리게 하는 작업이 가능하였으며 공간은 더욱 확장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상 전통 담장을 재해석한 콘크리트 캐노피
중 본관 뒷마당
하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실

auri 소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104

포럼 및 세미나

108

연구원 단신

114

건축공간연구원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전기차 확산에 따른 주거지역 충전설비 설치·운영 방안 연구	권오규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정책 개발	이은석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연구	손은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 농촌특화지구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여혜진
	저소득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방향 연구	김준래
	가설건축물 안전기준 마련 연구	이여경
수시 과제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공간환경 정책방향	유예슬
	건축행정 데이터 기반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현황 분석	안의순

기본과제

① 전기차 확산에 따른 주거지역 충전설비
설치·운영 방안 연구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는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정부는 전기차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은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전기차 구매희망자의 구매 욕구를 감소시켜 전기차 확산의 가장 큰 병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2022년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하였다. 개정된 법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3년 내에 시·도 조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시점(2022.1.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의 기축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면수의 2%이상은,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면수의 5%이상의 공간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포함할 수 있으나, 기축 공동주택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다수의 기축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사용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여 충전시설 설치 공간의 확보뿐만 아니라 충전시설 확충으로 인해 증가하는 전력량을 감당하기 위해 전력설비 증설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 및 구획 기준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자 편의성, 화재 안정성, 경제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기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축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사전에 진단하고, 효과적인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하고자 한다.

권오규

②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정책 개발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됨으로서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제도적 기준이 마련됐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 탄소중립도시의 조성은 도시에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그린도시사업」, 「탄소중립그린도시사업」이 추진됐다. 두 사업을 통해 도시에서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높이는 기후적응기술, 자원 순환을 통한 탄소고정기술 등이 공간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실증했다. 결과적으로 각 기술들이 도시에 분산되어 설치됨으로서 도시가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력을 향상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다. 기후 대응 기술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설계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용도·지역·지구의 기준 및 지침의 조율 없이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이 연구는 탄소중립도시가 미래 도시의 하나의 비전으로서 현실화되기에 필요한 선행 사업과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현 제도상 한계를 고찰하고 도시설계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을 기준으로 사업 실현성이 높은 지구단위 수준의 도시계획과 연계 할 수 있는 정책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탄소흡수·고정이 균형적인 기후위기 대응력이 강화된 도시가 우리나라에 일반적인 도시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결과가 탄소중립도시의 정책적·제도적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은석

③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연구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문화재보호법」 제2조제9항)으로 일반적으로 환수의 대상으로 인식

되어 왔으나, 2017년 「문화재보호법」이 현행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반출 문화재 외에도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건축물·공간환경 등 부동산 문화재인 국외사적지 또한 새롭게 포함되었다. 현재 국외사적지는 약 1천여 개소가 조사되었는데, 해외에 위치하여 실질적 조사 및 관리가 어려워 멀실·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외사적지는 건축물·공간환경 등 부동산 유산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환수가 어려워, 현지 활용의 정책 패러다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소재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활용하는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의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공유유산이란,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유산을 말한다. 기존의 국외사적지가 대한민국과 관련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면, 공유유산의 경우 이중 현지 소재국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유산이 대상이 된다. 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현지 소재국에서도 해당 유산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공동의 활용·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K-공유유산의 기초 개념을 정립하고 시범사례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외사적지의 멀실·훼손을 막고 문화유산을 통한 국제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손은신

④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 농촌특화지구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올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된다.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한 통합 지원 체계인 농촌협약제도를 통해 농촌공간정책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법에서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의 난개발에 대응하는 관리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국토·토지이용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운용되는 토지이용 관리수단이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에 따라 공장,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등 정주성을 침해하는 용도의 입지가 마을 내부와 인근에 무차별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적 여건과 농촌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대지, 생산환경과 관련된 농지, 목장용지, 공장용지, 자연환경과 관련된 임야, 하천 등의 토지이용이 혼합적으로 구성된 공간적 여건에 대응하여 토지이용의 공간적 구성 오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지침에서 농촌특화지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계획수립권자가 기본 계획에서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계획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행위규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 및 고시하는데 요구되는 세부적인 사항이다. 이에 따라 계획에 기반한 농촌 여건 맞춤형 용도 입지 관리가 정착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농촌 토지이용의 공간적 구성 오류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하고자 한다.

[여해진](#)

⑤ 저소득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방향 연구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도달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정책 간 연계가 미흡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주거분야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기존 고령자 주거안정과 복지서비스 연계 정책들은 주로 신규로 건설하는 임대주택단지의 확대와 지역사회와 단절된 노인복지시설 공급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들은 분명한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다양한 고령자 층위나 계층별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지역사회 지속 거주(AIP)'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상 저소득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과 정합성을 검토하려는 시도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한계를 진단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정책 유형별로 쟁점과 한계를 밝힘으로써 저소득 고령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지속 거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현행 저소득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과 지역사회 지속 거주 개념에 대한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에 지역사회 지속 거주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소득 고령자의 특성 및 복지 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법제 개정 사항, 정책 유형별 고도화, 공급 및 운영·관리 체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김준래

⑥ 가설건축물 안전기준 마련 연구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로 정해진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바로 철거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어,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령과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으로 허가 및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약 62만 동(세움터 제공자료)으로 2017년에 비해 2021년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건수는 약 1.8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을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일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는 751건, 인명피해 20명(사망 4명), 재산피해액은 34억 원이며,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는 1,304건, 인명피해 52명(사망 7명), 재산피해액은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건축물 관련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설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대응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건축물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취약한 구조이지만 존치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화재안전을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연구는 가설건축물 조성 및 안전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가설건축물 유형별로 합리적인 안전기준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최근 급증하는 가설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하여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여경

수시과제

①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공간환경 정책방향

우리나라 가족구성이 다양해지면서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도시에 정주하는 사회적 주체 중 하나로 바라보게 되었다. 공간의 관점에서는 반려동물의 산책과 외부활동을 행할 수 있는 균린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반려견 놀이터 설치 또는 기존 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은 기존 공공공간 내부에 작게 설치되거나 대규모 특화공원으로 별도로 조성되고 있는데, 주민 민원, 법적 규제 등으로 인하여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어렵게 대상을 선정하더라도 법률의 산재, 주무부서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조성 및 운영과정에 애로사항이 있고 반려동물 및 반려인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설계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현황과 조성 및 운영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공공공간을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슈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 조성 정책 추진에 참고가 되는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유예슬

② 건축행정 데이터 기반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현황 분석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지하층 주택(반지하)에 거주하는 국민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하층 주택 정책 수립 및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에 집중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하층 주택은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조건부 허용되었으나, 주택 부족으로 지하층 거실 설치기준이 완화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자가용 보유가 증가하여 주차장이 부족해지면서 주택 내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1층에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및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지하층 주택 대신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물이 늘어나고 지하층 주택 건축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하층 주택의 형성과 도태 과정과 최근 지하층 주택 관련 입법 경향을 반영하여,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의 기준을 단독주택(다가구, 다중),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용도 건축물 중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 없고,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조적조 구조인 주택으로 설정하고, 민간개방 건축행정 데이터에서 건축물 등 단위 전수 목록을 추출하여 전국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185,518동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의 92.2%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나타났고, 법정동 단위에서도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통계 및 전수 목록은 지하층 주택의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건축행정 데이터에는 건축물 각 층의 표고 정보가 없어 침수 취약성 판단에 한계가 있으며, 현장조사 등을 통한 검증이 후속되어야 한다.

안의순

제8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 개최

auri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4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양일간 공주 청년센터와 제민천 일대에서 '제8차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를 개최하였다.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는 매년 지역발전연구기관과 건축·도시 관련 현안에 대해 소통과 협력 연구를 추진하여 지역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는 '인구감소시대 지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이슈와 과제,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민간주체의 역할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대응방향 및 협동연구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행사 첫 날인 11일에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둘러싼 지역별 현안과 정책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축소도시시대의 유휴부동산 통합적 관리와 활용'을 시작으로, 권오상 퍼즐랩 대표의 '체류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방안'과 윤주선 충남대학교 교수의 '민관협력 마을재생', 끝으로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역소멸위기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서수정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맡고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박봉철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12일에는 행사에 참석한 지역발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공주 원도심 일대를 답사하였으며, 지역재생 간담회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공주 지역이주 등 지역활성화 관련 정책 대응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익적 주택법제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 주거문화연구단과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3월 27일(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공익적 주택법제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임대주택법제도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주택법제 관련 관계자, 공공임대주택 관계자 등 민·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연구'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체계에 대한 재편방향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방향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의 '사회주택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 사회주택의 정의와 운영현황을 짚어보고 다양한 거주기지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의 지향점을 살폈다. 세 번째 발제는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 모델 분석과 개선 방향'을 통해 새로운 주거패러다임과 공급모델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토론은 유숙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천현숙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도건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하여 사회주택의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23 건축공간연구원 -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 '건축도시분야의 ESG 전략'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4월 13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3 건축공간연구원-(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도시분야의 ESG 전략'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건축·도시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강지수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부회장이자 넬스랩 대표가 'ESG 개념과 트렌드'를 주제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개념과 관련 이슈를 통해 ESG의 도입 필요성과 전망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의 '친환경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활용 모형'을 주제로,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의 주요 사례와 관련 국내 상품을 살펴보았으며 녹색건축 채권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은 선주현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부회장이자 플랫그라운드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 전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건축·도시 분야에서 ESG의 한계와 이를 고려한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였다.

news

2023 대한건축학회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자산 정책세미나 '근현대 건축유산의 면단위 보전 관리 현황과 과제' 개최



auri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CPTED 정책 발전 방향 심포지엄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4월 27일(목) 부산 벡스코에서 '2023 대한건축학회-건축공간연구원 건축자산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근현대 건축유산의 면단위 보전 관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지자체 건축자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효과적인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제안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1부 주제발표는 박일향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상희 목원대학교 교수의 '소재동 건축유산과 도시재생에 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 마지막으로 김미정 조선대학교 건축문화연구실 연구원의 '거문도 근대건축자산 고찰'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2부 종합토론은 '면단위 근현대 건축유산의 관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송석기 군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야 시간과 공간연구소 이사가 참여해 소재동 건축자산과 거문도 근대건축자산의 관리방향과 한계, 면 단위로서 건축자산 보존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과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4월 28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공동 학술 심포지엄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CPTED 정책 발전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부영준 법무부 보호정책과 사무관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통해 중앙부처의 CPTED 사업현황과 향후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임보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설계 방안'으로,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윤진희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미국 CPTED 사업(Project Green Light Detroit, 이하 PGLD) 현황 및 영향 분석'으로, 미국 디트로이트에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PGLD의 의의와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마지막 주제 발표는 오하늘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원이 'CPTED 사업 효과가 있나요?'를 주제로, 시설물의 정량적, 정성적 효과 분석 결과를 설명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강석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기욱 부산연구원 시민안전연구센터장, 이연지 이음파트너스 이사, 이승재 목원대학교 교수, 조영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CPTED 사업과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K-Village, 한옥마을 생각하다' 개최



2023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 '20세기 도시설계를 넘어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4월 28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2023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K-Village, 한옥마을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한옥마을의 보급현황 및 기획단계 시 고려사항 등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한옥마을 보급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방보람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현황과 과제'로, 한옥마을의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결과를 통해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이재용 오피스베타 본부장의 '고양창릉 역사문화마을 마스터플랜'으로, 세계문화유산 서오릉에 인접한 부지에 계획 중인 한옥마을 마스터플랜 수립과정 등을 소개하고 쟁점사항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 발제인 구본환 건축사사무소 오른 대표의 '화성 태안3지구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진행과정'은 한옥마을 고유특성을 살리기 위한 가로 구성, 주차 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김성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정책팀장의 '서울한옥 4.0 정책에 따른 한옥마을 확대 조성사업'을 통해 사업의 주요내용 및 한옥마을의 세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류성룡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고주환 새한티엠씨 대표, 안선호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유식 서울특별시 한옥정책과장, 신치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였으며, 한옥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news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5월 16일(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3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건축·도시 분야 지식 공유 및 정책현안 진단,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을 위한 자리로, ZOOM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와 함께 진행하였다.

발제는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20세기 도시설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 거주자 니즈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탐색하고, 도시 내 저이용 토지를 활용한 도시공간의 재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컴팩트시티'의 사업배경과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강현수 前 국토연구원 원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주거복지를 넘어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 자유토론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현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정책본부장,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주거문화연구단장,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다중 주거 거점, 농촌공간 재구조화, 비용과 효율·안전을 고려한 도시설계와 건축물 등 건축·도시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2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문화자산센터 공동세미나 '국내 교정시설 건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개최



auri

2023년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건축공간연구원 기획발표세션 진행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건축문화자산센터는 지난 5월 17일(수)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서 건축자산의 관점과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쟁점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에 '국내 교정시설 건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을 연사로 초청하여 교정시설의 역사와 정책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짚어보았다.

주요 내용으로 조선시대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모습을 살펴보고,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주요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뿐 아니라 교정시설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5월 19일(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 및 포스코관에서 2023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기획발표세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등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여 기획발표세션, 특별세션, 자유발표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기획세션발표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윤진희 부연구위원·최가윤 연구원·고영호 연구위원의 '연령통합 생활환경지표 연구'를 시작으로, 한승연 연구원·고영호 연구위원의 '지역사회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연구', 김준래 연구원·변은주 연구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돌봄-거주 연계 모델 기본방향'을 각각 발표하였다. 한편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유애정 건강보험 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정책연구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기존 제도의 한계와 시범사례 등을 짚어보고 노인 복지를 위한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2023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개최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수)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에서 '2023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경기도의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고용수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과장의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최호진 성균관대학교 공학연구원의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협안', 김재영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 대리의 '공간정보 기반 건축자산 관리 효율화'를 차례로 발표하였다.

제2부 종합토론은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기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8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원 중심의 부문별 접근을 넘어서 에너지, 건물, 교통, 자원순환, 흡수원 등을 바탕으로 우리의 고유한 도시공간에 특화된 종합적인 접근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조성과 확산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도시설계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통합관리 방안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승일 서울시립대 교수의 기조발제 '미래 변화를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길'을 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구성하였다.

주제발표에는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조성과 확산방향',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도시설계 방안',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정책적 통합관리 방안과 입법 과제'를 각각 발표하였다.

패널토론은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포럼 운영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건원 고려대학교 교수, 권용석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장, 윤의식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한국형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news

2023 국제 공공건축 네트워크 연례 컨퍼런스 참석



4월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워싱턴 D.C에서 미국 중앙조달기관(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이 주최하는 ‘2023 국제 공공건축 네트워크(The Workplace Network, 이하 TWN)’에 이영범 원장을 비롯하여 조시은 부연구위원, 백선경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등 총 19개 국가의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TWN은 공공자산의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균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다시 열린 올해 행사에는 회원국들의 주요 이슈를 업데이트하고 업무환경의 미래, 기후와 지속가능성, 변화관리, 데이터 등 공공자산 관리에 관한 의제를 공유하였다.

행사 1일차에는 회원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환영회를 치렀으며, 행사 2일차부터 본격적인 주제발표와 토론 세션을 진행하였다. 먼저 이영범 원장은 회원국 현황 발표 세션에서 TWN이 지정하는 4개 부문(Workplace/return to work, Climate & sustainability, Change management, Data metrics)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의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였다.

행사 3일차에는 조시은 부연구위원이 ‘Climate and Sustainability Industry Roundtable’ 토론 세션, 행사 4일차에는 백선경 부연구위원이 ‘Presentation on Data Gathering/Metrics & Group Discussion on Data & Metrics’ 토론 세션에 각각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공공건축 관련 기관 간의 국제적 협력체계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각국의 공공건축 및 공공자산 관리 관련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논의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가질 수 있었다.

건축공간연구원- 청주시 서원구청-청주상당경찰서- 서원대학교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청주시 서원구청, 청주상당경찰서, 서원대학교는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환경모델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지난 5월 18일(목)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주상당경찰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컨설팅 ▲지속·확산 가능한 범죄예방 환경 모델 ▲범죄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학술 정보·통계오류 및 각종 지표 공동 발굴을 위해 지원하게 된다. 향후 4개의 기관은 지속가능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모델 마련과 더불어 모델 확산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주기적인 정보 교류 및 학술 발표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범죄 예방 환경조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자 한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 전략”이라며,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 기관과 함께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선도적인 모델을 발굴하여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는 아시아 국가 및 도시의 공간환경에 관한 연구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지난 5월 19일(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 과제를 위한 공동 연구 수행 ▲공동 세미나, 연구토론회, 국제컨퍼런스 등 국내외 관련 행사 개최 및 참여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제공 및 교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 교류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된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각종 사회재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아시아 도시의 공간환경 관리와 발전을 위해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과 국내외 성과 확산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

건축공간연구원 2023년 수행 연구과제

기본과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민지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윤호선
1기 신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건축 정책 추진방안 연구 김성준	위드 코로나 시대 생활권 공공시설의 대응방안 연구 남궁지희
에너지 빈곤층 대상 그린리모델링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문보람	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한 건축물 생산량 지수 개발 연구 조영진
제조·조립 기반 건축 활성화 방안 연구 김은희	가설건축물 안전기준 마련 연구 이여경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보전·활용을 위한 정비 기법 연구 김종범	저소득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방향 연구 김준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작물 관리체계 마련 연구 현태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 농촌특화지구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여혜진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 박일향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연구 손은신
중·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간주도·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 박석환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정책 개발 이은석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도시 소멸마을 진단체계 연구 박성남	전기차 확산에 따른 주거지역 충전설비 설치·운영 방안 연구 권오규
재난대응시설의 확보·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백선경	

수시과제

물류창고 안전 관련 건축 기준 합리화 방안 이주경	건축행정 데이터 기반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현황 분석 안의순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공간환경 정책방향 유예슬	

수탁과제

제2차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김성준	공작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허한결	권역별 산림교육·치유시설 조성 계획 수립 이상민	다중 분산발전 기반의 옥상온실형 스마트 그린빌딩 융복합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이은석
인구구조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연령통합 생활환경지표 연구 고영호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 선정기준 마련 연구 남궁지희	2023년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수행용역 임보영	국가 탄소중립 도시 지정 대응전략 및 지역별 조성방안 마련 연구용역 이은석
건물부문 2030 탄소중립 세부 이행 로드맵 수립 연구 박성남	미래형 국토도시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선방안 연구 성은영	4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신치후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 김은희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 새뜰마을 생활인프라 활성화 방안 연구 이여경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권오규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제도 협력화 정책연구 김은희	보행안전지수 시범운영 및 활용기반 구축 용역 남궁지희
3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신치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평가지표 개발 임보영	역시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운영방안 마련 연구 심경미	2023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등 한옥홍보 기획 및 운영관리 신치후
지역 공간환경 통합관리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편방안 연구 임유경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김영현	주차장 구조안전기준 및 제도개선 연구 안의순	스마트플러스빌딩 로드맵 수립 및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조상규
생활권 도시계획과 연계한 생활인프라 기준 마련 연구 성은영	농촌형 특화지구 지정기준 설정방안 여혜진	2023년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건축물관리제도 모니터링 및 정책지원) 조영진	2023년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운영관리 위탁용역 이여경
건축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등 감리제도 개선 연구 김은희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 전략 연구 여혜진	2023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공공건축 지원업무 위탁 엄운진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연구 오성훈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여경	문화재 관리 체계에서 세계유산지구 관리 방안 연구 이규철	초고령사회 보행환경 평가 및 개선시스템 개발 오성훈	스마트+빌딩 핵심기술 개발 기획 남성우
탄소중립을 위한 시장 활성화 및 부문 간 연계방안 연구 : 건축물 시장을 중심으로 박성남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수집 및 홍보방안 연구 엄운진	'23년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서수정	'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모니터링 이상민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주거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김꽃송이			

건축공간연구원 연구보고서 안내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2022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22-1
신산업 관련 건축 법제 개선방안 :
데이터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2
농촌 마을 공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3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4
개인형 공동모빌리티 이용활성화를
위한 건축·도시공간 대응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5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생활권 단위 공간계획 모형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6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7
폭염대응을 위한
도시 가로녹지계획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8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9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소형
공동주택시설의 건축기준 정비 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0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소규모 공동임대주택을 중심으로-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1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형 놀이자원망 구축 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2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3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시범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4
건축행정 통계 개선 및
공간정보 융합 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5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6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7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분석방법 연구
2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1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2
다양한 거주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3
거주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문화 정책과제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4
관광안내소의 효과적 설치·운영을 위한
입지 및 공간 기준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5
공간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가설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6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정비 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7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8
스마트건축 인증 도입 및 운영 방향 연구
1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
보도의 계획 및 설계기준 개선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2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 기준 및
체계 마련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3
스마트도시계획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4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5
빅데이터 기반 건축물 화재 예측
모델 개발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6
기상환경을 활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요소 도출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7
지역사회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
모델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8
지역자원 활용 기반의
도시재생회사 사업모델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9
건축자산 진흥구역 활성화 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0
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
행정복지센터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1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2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1
지자체 경관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2
한국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10,000원

2021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21-1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체계 구축방안: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2
스마트건축 산업화 모델 및
제도 기반 확충에 관한 연구
3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3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의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4
쇠퇴지역 공간관리를 위한
빈집 정책 개선방안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 방안
3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6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7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계획 및 사업 개편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8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9
포스트코로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언택트 어버니즘 전략 연구
2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0 인구감소시대 노후공동주택 빙집의 실태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 26,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3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CRDPs) 연구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6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도입 방안 연구 2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1 시민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7 스마트건축 개념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 인증제도의 개편 방향 20,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3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2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31,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5 범죄두려움 저감을 위한 도로조망 조도 기준 연구 14,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8 미세먼지 민감군을 위한 공공건축물 시설 계획 기준 연구 26,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4 창의적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3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3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6 근린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운영방안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9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체계 구축 방안 33,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5 보행편의지수 개발 및 보행정책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4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정책 방안 28,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7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0 한국형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정소프로파일링 기법 개발 연구 17,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6 포스트코ロ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성화 방안 8,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5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28,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8 보행자길 조성·관리를 위한 보행행태 및 인식 분석: 보도를 중심으로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1 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1 국토경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경관법 개정 방안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9 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 국민체육센터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2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2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 16,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2 건축물 환재안전 성능설계 도입 및 제도화 연구 1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10 민간시장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개선 방안 연구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 재생 방안 연구 4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3 고령자 건강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 생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19,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3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 15,000원	2020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20-14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2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4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효과성 분석 10,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4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위한 건축기획 개선방안 연구 1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 민·관 협력을 통한 노후 공원 재정비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5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방안 연구 21,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5 서울시 도로다이어트사업의 성과 및 효과평가 연구 - 2018~2019년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 16,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5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1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2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3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6 리빙랩을 활용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주거계획 지원방안 2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6 2019년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의 성과 및 효과평가 연구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 14,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6 농촌마을의 공동화 현황 및 공간관리 수요 분석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7 노상주차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가로공간 개선방안 연구 2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7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1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현황과 과제 - 특·광역시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과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4 지역 경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8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8 그린뉴딜을 통한 도시 기후변화 정책개선 방안 19,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2 스마트도시 기술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방향 연구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5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29,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1 건축구체 합리화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9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건축공간연구원 신간 안내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비매품이 아닌 발간물은 서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출판·홍보팀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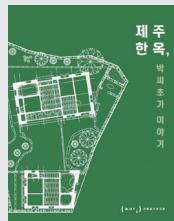
보행자우선도로 매뉴얼 2022
오성훈, 남궁지희,
김영지, 변혜영
비매품



한눈에 보는 건축민원
빅데이터 2021
이여경, 이주경,
김민지, 흥예은
비매품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안내서
이규철, 박채린
비매품



제주 한옥, 박씨초가 이야기
국가한옥센터, 양건, 김태일,
고기봉, 이창규, 강정운
비매품



세계건축법제동향 2022
이여경, 김준례, 오세원
비매품



어촌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손동필, 임보영, 허재석
비매품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2
김상호, 김은희, 조시은, 오민정
비매품



2021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
비매품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가이드 202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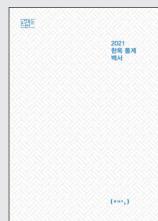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202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공공건축 가이드 0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 202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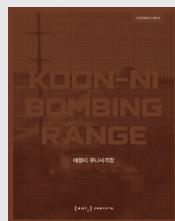
국토경관
GOOD PRACTICE 3
심경미, 이세진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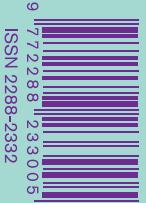
2021 한옥 통계
백서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매뉴얼
한수경, 김영지
비매품



우수건축자산 이야기
- 매향리 쿠니사격장
이규철, 이세진, 이연경,
김용한, 김웅기, 김기웅
비매품



32
9 772288 233005
ISSN 2288-2332

2012.000원



건축공간연구원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복리의 향상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www.auri.re.kr